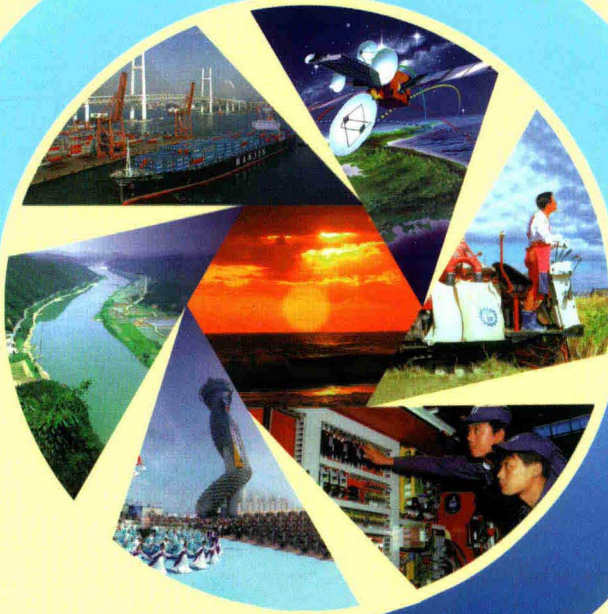


정·책·담·당·자·가·만·드·는·경·제·전·문·지

# 나라경제

# 99.11



##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나

**정책** 뉴라운드의 출범과 대응 방안

**해설** 국가채무, 우려할 수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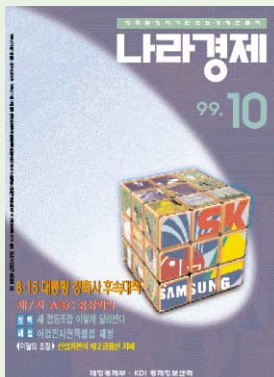
◀이달의 초점▶ 11월 금융위기설-현실화 가능성은?

재정경제부 · KDI 경제정보센터

1999년 11월 1일 발행 · 제10권 제11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문화 리 04899호 발행처/KDI 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암면동 207-41 전화 (02)958-4114 · 월간 | ISSN1227-8033 11

# 나라경제

1999년 11월호  
통권 제108호



1999년 10월호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 4 권두칼럼 역사의 理路/이수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6 만남 안병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윤식 · 숭실대학교 교수

## 특 집 2000년 나라살림, 어떻게 짜여졌

나

- 12 새 천년 대비와 건전재정으로의 조귀 복귀  
/배국환 · 기획예산처
- 17 과학기술력의 확대/김태환 · 과학기술부
- 20 정보화 부문 투자 강화/형태근 · 정보통신부
- 24 미래 지향형 교육투자/황인철 · 교육부
- 29 문화 · 관광산업의 진흥/이서해 · 문화관광부
- 33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삶의 질' 향상  
/이계용 · 보건복지부
- 37 산업기술의 혁신/문선목 · 산업자원부
- 41 농업 · 농촌의 재도약/정 승 · 농림부
- 45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류영창 · 건설교통부
- 49 맑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김상일 · 환경부
- 53 해양부국의 기틀 마련/박남춘 · 해양수산부
- 58 바람직한 재정적자 관리 방향/고영선 · 한국개발연구원

## 이 달의 초점 11월 금융위기설 - 현실화 가능성은?

- 64 11월 금융위기 우려된다/우재룡 · 한국펀드평가(주) 대표이사

## 경제수상

- 70 왜 지금 '꿈꿈이 운동'인가?/김상선 · 과학기술부  
72 21세기의 話頭-바이오 & 디지털/이수화 · 농림부  
73 바다, 그 무한한 가능성에의 도전/이갑숙 · 해양수산부  
75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노동부 노사협력관실**  
/김경무 · 한겨레신문 기자  
79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김혁규 경상남도지사  
86 **세계경제의 현장** 지역협정과 WTO/최경림 · 駐제네바대표부

## 경제정책해설

- 90 뉴라운드 출범과 대응 방안/이시형 · 외교통상부  
94 국가채무, 우려할 수준 아니다/임영록 · 재정경제부  
97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이행현황과 발전 방안  
/이필재 · 환경부  
101 **차세대 이동통신 정책 방향**/임종태 · 정보통신부

- 105 **예산절약사례 2** 유도탄 구매사업비 절약/이일순, 이도원

## 경제동향

- 108 나라밖 : 국제유가, 연말 고비로 한풀 꺾일 듯/서승원 · KIEP  
112 **나라경제 광장** 단순한 관광과 여행의 차이/이현승 · 재정경제부  
114 **한국경제에 관한 외신보도 동향**  
120 **주요 경제지표**



만남: 안병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VS 이윤식 숭실대학교 교수

##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 나라경제

편집/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재정경제부  
KDI 경제정보센터

발행인/이진순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편집인/한성택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단장

### 편집위원

재정경제부/김봉익 ·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외교통상부/김영소 · 통상정보담당  
과학기술부/이만기 · 정책총괄과장  
농림부/이준원 · 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진 홍 ·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김재섭 · 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이계용 ·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부/남재우 · 정책총괄과장  
노동부/남석현 ·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부/이재영 ·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박남춘 · 기획예산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이병주 · 총괄정책과장  
기획예산처/배국환 · 예산제도과장  
금융감독위원회/박환균 · 기획과장  
KDI 경제정보센터/조병구 · 연구위원

편집간사/백우진 ·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집장/김인철 ·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이기덕 · 이상주

업무/안의일

인쇄/유성사

나라경제 · 1999년 11월 1일 발행(매월 1회 발행) 제10권 제11호  
(통권 제108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문화 라 04859호

발행처/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

11301-01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1301-6501 서울 청량우체국 사서함 113

대표전화 (02)958-4114 · FAX (02)3295-0748

홈페이지 주소 : <http://epic.kdi.re.kr>

인터넷 e-mail : [nara@kdiux.kdi.re.kr](mailto:nara@kdiux.kdi.re.kr)

처리안: kcee, 하이텔: pcee

기사문의 : (02)958-4632, 4635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2)958-4327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역사의 理路

## — 새 천년 새 세기의 빛과 과제

이 수 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想念과 성찰을 이으며 세상사의 이전과 오늘을 되새겨보면 역사란 인간의식 속에서 포착되고 증류된 事象의 점철이자 시대의 증언이라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20세기는 잊지 못할 기복의 고개를 수없이 넘어왔다. 조선조의 봉당싸움과 구한말의 쇄국정책으로 개화를 지체시켜 망국·식민시대의 쓰라린 비운을 겪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광복 이후 분단과 동족상잔의 참화를 겪고 말았다. 이 민족적·국가적 대순실의 여진으로 남북의 분단 54년, 이산가족 1천만의 비애가 지금껏 가시지 않고 있다.

반면에 영광의 빛과 열매 또한 컸다.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전국민이 단합하여 항거한 3·1 독립투쟁과 그 결과로 세워진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으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또, 사상초유의 민주국가를 영원히 보위·발전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궤기하여 공산침략을 물리쳤다.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민주적 역량을 계속 키우고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도 했다. 국력의 총체적인 비약을 바탕으로 88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켰고, 유엔가입의 실현과 함께 그 일부 주요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넓은 세계와 만나 국제적으로



이름 높고 영예로운 위상과 민족의 자존을 떨쳐가고 있다.

이제 榮辱의 지난 한 세기를 보내면서 새 천년, 새 세기를 앞두고 풀어야 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국민의식·지혜·도덕성의 회복과 지역계층간 분열의 극복, 환경정책, 복지정책 등 수없는 난제가 쌓여있다.

그러면 새로 맞는 21세기에 나라와 민족의 좌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첫째, 세계화시대의 앞줄로 나서 인류와 인간문명을 이끌고 빛내는 일류의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직도 불안정한 평화상태와 각종 분쟁에서 오는 지구 곳곳의 황폐화 현상, 심화된 빈곤과 기아, 이로 말미암은 도덕성의 퇴폐를 불식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우리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극복하여 안으로는 민족적 불행을 해소하고 밖으로는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화해자로 나서야 한다.

넷째, 이런 내외의 민족진운을 기조로 민주적 평화통일을 기필코 구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IMF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오늘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갈등과 대결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국경을 넘어선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도전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세계의 흐름에서 낙오하는 민족은 현대에서 도저히 興旺하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제적인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 남고 승리하기 위해 세계각국이, 그리고 모든 민족이 치열한 爭鬪를 하고 있는 현대에서 우리는 잠시도 멈추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 오늘처럼 시련과 도전이 점철된 시기에 탐욕과 위선, 편견에서 벗어나 순수함과 열정과 무한한 헌신, 그리고 민족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희생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점에서 민족의 내일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추구하겠다는 확고한 지향점도 없이 당리당락에만 몰두하는 일부 정치인의 탐욕과 갈등, 혼돈과 정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병폐요, 모두가 풀어야 할 당위적인 숙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국력을 소모하는 비열한 政爭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편견과 증오, 분당적 대결과 이기심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선하고 순수한 국민을 오도하여 지역분열·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기이익을 충족시킨다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진정한 긍지도 아니다. 그것은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인 행위이다.

국민이 단합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의 후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집단·계층·지역간의 장벽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마음의 장벽이다. 이러한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배타심이나 적대감을 없애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국제경쟁과 남북대립의 와중에서 한반도

와 동북아에 평화와 신뢰의 새 질서를 세워 가는 일 역시 시급하다. 일찍이 무력정복이나 경제적 지배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도 잘살면서 인류 전체가 의롭게 살도록 하자는 백범 金九선생님의 혜안은 오늘날 동북아와 세계사의 신질서를 선언하는 예언적 성찰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올바른 정신력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여 빛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백범선생님의 말씀은 바로 21세기 한국을 최선진의 문화국가로 만들어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진정한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단 하나의 길이다.

우리의 21세기를 향한 이 같은 나라와 민족의 좌표, 그 과제 앞에서 전진과 도전을 주저할 時空의 여백은 없다. 인간답고 품격이 높은 사회, 모두가 마음 편하며 잘사는 그러면서도 건강한 국민정신이 바탕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키우며 새 시대 새 세기 벽두부터 성심과 열정을 다한 헌신으로 진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성취와 승리는 그에 따른 산물이며 결과이다. 새 천년의 초기에 우리는 또 다시 침잠될 수 없다. 이미 이룩해 놓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도약대로 딛고 세계로 미래로 웅비의 나라를 힘차게 펼쳐 가야 한다.

4,700만의 국민과 7천만 거래의 격조높은 위상, 행복한 미래상을 다짐으로 새기며, 희망의 앞날을 밝혀 가는 예지 속에 우리 역사의 이로(理路)는 비쳐 있다. 새 세기에는 평화와 통일, 민족복지를 향해 한민족공동체가 떳떳함과 올바름 그리고 겸허함으로 언제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心力을 다하면서 후손들에게 잘사는 조국을 반드시 물려주자. ■

# 안병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담 : 이윤식 숭실대학교 교수

• 때 : 99년 10월 18일 • 곳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실



—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자주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기능과 역할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의지에 따라 98년 4월 대통령직속기구로 발족하여 장관급 위원장과 관련부처 차관 및 중소기업계, 학계 대표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기동성 있게 정책화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입니다. 특위 회의를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각 부처의 주요 중소기업정책을 심의·조정 및 평가하며,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고정멤버로 참석하여 중소기업을 위한言論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장 1명, 과장 3명 등 8명의 공무원과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박사급 전문위원을 파견받아 모두 24명으로 사무국을 구성하여 일할 체비를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 지난 10월 12일 중기특위가 주관하는 '제1회 전국중소기업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에 따라 98년 4월 대통령직속기구로 발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화하며, 중소기업정책의 큰 틀을 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습니까?

▲ 제1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인 150여명을 비롯, 정부 및 유관기관, 학계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 주재 아래 새 시대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를 새롭게 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애써온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함은 물론 지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수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과제를 종합보고하고, 그 이행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기업인의 역할과 책임, 정부의 정책방향, 대

기업의 협력 및 소비자의 관심과 애정을 포괄하는 '중소기업현장'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대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어음제도 개선,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 여러 가지를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어음제도에 관해서는 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시 현금결제비율을 지금의 30%에서 50%로 높여가도록 유도하고, 소액어음에 대하여는 1억원까지 특례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



대담자 이윤식 **숭실대학교 교수**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40%, 민간이 60%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전국에 20여개의 벤처타운을 지정하여 벤처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며 신기술 우수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30%가 밀집되어 있는 영남지역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중소 도시에도 소상공인지원 센터를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이번 대회에 앞서 위원장께서는 각 지방을 순회하며 지역대회를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중소기업계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 저희 중기특위는 위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있고 그 해답도 현장

에서 나온다”는 인식 아래 지난 6~7월 두 달 동안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4천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참가하였고 40여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한 현장민원실을 통해 총 1,088건의 민원을 접수, 85%를 현장에서 조치하였습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인들의 정책건의를 수렴하였습니다.

현장을 돌면서, 경기회복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장래를 위한 설계와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현정부 들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면서 여러 부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주도권 다툼이나 정책혼선을 빚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 현재 중기청·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15개 이상의 부처가 열심히 중소기업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문제는 특성상 다면적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어

여러 기관에서 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는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중소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간 상호협력과 조화를 이끌어내고 정부 전체로서의 일관된 시각과 정책의 틀을 가져야 하므로 중기특위는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문제를 조망하고 각 부처의 시책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각 부처별로 경쟁적·산발적으로 운용되는 데 따른 중복·편중 지원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99년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12개 부처에서 6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98년 11월 중기특위 아래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자금금리의 불균형 해소, 심사기준의 표준화, 심사기관의 전문성제고 및 정책자금의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중기특위에서 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 요원들

전 검토하여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기획예산처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정부의 벤처기업지원 시책이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법정화하고, 해당 요건을 구비한 업체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주고 있으며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입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확충 등 간접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의 벤처기업 역사가 일천하고 벤처캐피털 등 민간의 지원기능도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내 벤처붐을 조성한 것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벤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 사계의 전문가들로 특별팀을 구성하여 벤처기업 지원시책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마무리 되면 각 부처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중기특위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 중소기업 육성은 「국민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실업난 해소, 중산층 육성, 산업의 지식화·고도화 등 주요 정책과제들이 만나는 교차점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한

첩경이며 핵심요소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중임을 맡은 우리 중소기업특위는 다음 몇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주요한 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각 부처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10개년 발전비전」을 수립·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기특위의 심의기능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 및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9개가 넘는 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보강하여 향후 중소기업 정책개발과 중소기업의 구조분석에 유용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벤처시책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도출하고, 또한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 새 천년 대비와 건전재정으로의 조기 복귀

**지** 난 9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희망의 새 천년 첫 해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번째의 본예산이다. 첫번째 예산은 IMF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부분에 재원배분의 역점을 두었다.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곳으로 재원이 집중된다 보면 다른 부분들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계가 있는 예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예산은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편성할 수 있었다. 경제가 1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락하는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국력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여 당면한 금융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을 확대했다. 또한 구



백국환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과 공공근로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 등 일자리 창출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재정의 적극적인 거

시경제적 정책은 우리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금년은 7~8%의 높은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률도 8~9%대에서 5%대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의 역할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IMF 경제위기를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도약할

〈표 1〉 1999년 및 2000년 경제전망

	1999년 전망	2000년 전망
GNP		
· 경상성장률	8% 수준	8% 수준
· 실질성장률	7% 수준	5~6% 수준
GNP디플레이터	0~1%	2~3%
소비자물가	1~2%	2~3%
경상수지	177~228억달러 수준	79~149억달러 수준
실업률	6% 수준	5~6% 수준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난 2년간의 암울했던 시간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이제는 다가오는 새 천년을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재정운용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긴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도의 재정운용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고, 건전재정으로 조기에 복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계 질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가 산업사회를 대체하는 등 변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다.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재정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재정규모는 93조원 수준

2000년 재정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5% 늘어난 92조9,200억원이다. 재정규모는 통상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

2000년 재정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5% 늘어난 92조9,200억원이다. 재정규모는 통상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 예산을 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증가율 5%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8%보다 3%p 낮고 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18.8%로 국민 1인당 담세율은 208만원이 될 전망이다.

예산을 합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증가율 5%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8%보다 3%p 낮고 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도 증가율 5%가 금년도 추경 등을 감안할 때 팽창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금리상승과 재정적자폭의 확대를 억제하려면 재정이 보다 긴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쟁은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있어 왔다. 사실 적정한 재정규모가 얼마나 하는 것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든 사항이다. 통상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정규모도

증가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학자들은 각 나라의 경제여건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재정규모 증가율이 결정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정운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필요하며 또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표 2〉 재정규모 추이

(단위 : 억원, %)

	19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836,852	867,364	30,512	3.6
· 국세	623,857	690,131	66,274	10.6
· 내국세	486,770	544,707	57,937	11.9
· 교통세	92,175	94,424	2,249	2.4
· 관세 등	44,912	48,283	3,371	7.5
· 주세보전분	-	2,717	2,717	순증
· 세외수입	84,087	62,233	-21,854	-26.0
· 주식매각	38,736	35,153	-3,583	-9.2
· 기 타	45,351	27,088	-18,272	-40.3
· 국채발행	128,908	115,000	-13,908	-10.9
채특회계	47,998	61,836	13,838	28.8
합 계	884,850	929,200	44,350	5.0

그러나 재정규모 증가율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생산적으로 쓰이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편, 일반회계와 재특회계(순세입) 및 기타 22개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규모는 99년도 130조4천억원 수준에서 6.3% 증가한 138조7천억원 수준이다.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99년보다 3.6% 증가한 86조7천억원 수준으로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세정개혁 등으로 6조6천억원 정도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주식매각, 한은잉여금 등이 줄어 2조2천억원 가량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11조5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는 금년도 12조9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이 줄어든 규

모이다. 재정용자특별회계의 순세입 규모는 융자회수가 늘어나 1조4천억원이 증가한 6조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18.8%로 국민 1인당 담세액은 208만원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서 복지국가가 되어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담세액이 200만원 이상 되었다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내년에 1인당 담세액이 늘어난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소득이 자연적으로 증가된 데 기인한 것이지,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거나 세율을 인상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1인당 담세액은 단순평균한 것으로서 4인 가구당 800만원이 된다는 것은 실제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세금 중에는 개인소득과 관계없는 법인세·부가가치세·자산재평가세·관세 등이 대부분으로서 개인이 직접 내는 소득세는 전체 조세수입의 20%에 불과하다. 한편 1인당 담세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97년과 98년 당초 예산 편성시에도 200만원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내년도 담세액이 과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새 천년에 대비

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의 준비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

과학기술과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R&D 투자비중을 정부예산의 4%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전자통신·생명과학 등 21세기 뉴프론티어 연구와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 핵심산업 생산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액하였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초고속망·초고속 교환기 등을 확충하여 전국 144개 지역을 광케이블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낙후된 교육여건에서는 우수한 미래 인재양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초·중등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시설과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대학도 경쟁과 창의

〈표 3〉 전체 재정규모

(단위 : 총계기준, 억원, %)

	1999년		2000년		
	예산	증가율	예산(안)	증가액	증가율
일반회계 재특 <sup>1)</sup>	884,850	9.6	929,200	44,350	5.0
특별회계 <sup>2)</sup>	419,635	3.5	457,688	38,053	9.1
합 계	1,304,485	7.6	1,386,888	82,403	6.3

註 : 1) 재특 순세입

2) 재정용자특별회계를 제외한 22개 특별회계

〈표 4〉 조세 부담률 추이

(단위 :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예산(안)
19.7	19.5	18.8	18.6	18.8

를 통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대학원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재원도 반영하였다.

21세기는 문화경쟁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추어 내년 예산안에서는 문화예산 비중을 처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로 제고하였다.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전략 산업으로서 재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새로운 세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유버스를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1,500대를 보급하고 2002년까지 총 5천대로 늘릴 것이다. 팔당·낙동강 등 4대강 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과 해양오염 방지에 지원금을 늘렸다.

2000년 예산은, 새 천년에 대비하고 산업경쟁력 기반을 확충하며,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또한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의 조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였다.

### 산업경쟁력 기반을 확충

두번째로 역점을 둔 부분은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확충한 것이다. 벤처·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업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방식도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전환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자동화·정보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디자인·정밀화학 등 지식기반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농업은 농수산물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지원 내용면에서는 시설투자보다 물류·운영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축·인삼협의 통합, 농어민 63만명

의 연대보증 부담경감, 농업경영 종합자금제 시행 등은 우리 농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어업도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기르는 어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국민생활 편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분야이다. 특성상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시설운영시스템 개선, 철저한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재정부담을 덜고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의 민간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001년까지는 건설중인 주요 고속도로 신설과 확장을 완공 위주로 투자하여 2001년 추석부터는 귀성길 교통정체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도 계획대로 2001년, 200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표 5〉 조세 부담률 국제비교(96년)

(단위 : %)

미 국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일 본
21.5	29.8	22.6	26.0	18.1

###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

셋째로는 더불어 사는 사회구

현을 위해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하였다. 우선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발맞춰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수준이 강화되고 대상자도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확대된다.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4대 사회보험을 확충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소득층 5세 어린이 2만3천명이 유치원 학비보조비를 받고, 중고생 40만명도 학비를 지원받게 되는 등 돈이 없어 교육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융자 대상자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한다. 용자규모로 보면 금년도 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9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지원을 확대하였다. 경로연금 지원대상을 72만명으로 확대하고 연금도 증액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저소득층 보육료·소년소녀가장 생활용품 지원비 인상,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사회복지 지원은 그간의 단순시혜적 공적부조에서 인적능력개발 등을 통한 자립자활이 가능한 생산적 복지지원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하였다.

지난 여름에는 수해로 서민생활의 고통이 컸다. 따라서 다시는 그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대폭 늘렸다. 하천·배수시설·기상관측 시설 등 항구적인 수해방지 투자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서민들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안전을 위한 식의약품·전염병·교통·시설물안전 관련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넷째로는 지방의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3.7%에서 15%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약 1조 원 가량이 지방에 추가 지원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지방주행세 형태로 이전하고 자발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시·도 예산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재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전재정의 조기회복 노력 본격화

다섯째는 경제정상화에 따라 건전재정의 조기회복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재정규모 증가율을 5%로 억제하여 재정팽창에 따른 적자증가 요인을 제거하였다. 내년도 규모증가율 5%는 예상 경

상성장률 8%에 비해 3%p나 밑도는 수준으로 92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국채발행도 금년 12조 9천억원에서 11조 5천억원으로 축소하여 재정적자가 GDP의 -4.0%에서 -3.5%로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는 IMF 위기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단기실업대책, 금융지원 등 한시적인 예산을 축소하거나 정상화하는 등 적자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균형재정으로의 회복시기는 금년초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예상했던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적자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歲計잉여금의 국가채무 사용 의무화, 새로운 세출소요의 재원대책 의무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고 건전재정으로 조기회복을 목표로 하는 2000년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고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 하루빨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재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과학기술력의 확대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변화와 격동의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다가오는 2000년대는 산업문명에서 정보문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정보력·기술력 및 지력이 지배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전개될 것이며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과학기술부 예산, 99년 대비 11% 증가한 8,668억원 편성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예산 대비 R&D 투자 비중을 99년 3.7%에서 내년에는 4.1%로 대폭 높였으며, 투자규모로는 99년 3조 1천억원에서 3조 5천억원으로 12.9%를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과학기술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2000년도 과학기술부 예산



김태환

과학기술부 기획예산담당관

(안)은 99년 대비 11%인 856억원이 증가한 8,6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3%가 증가한 8,418억원, 재정융자특회계는 44.4%가 감소된 250억원이다.

특히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출연기관 육성지원사업 등의 연구개발 예산은 99년 대비 15.7%가 증가한 7,567억원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연구성과지원사업을 99년 대비 510%가 증가한 12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여 수요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 및 특허등록 지원, 신기술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배양하고 핵심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82년부터 추진된 특정연구개발사업비는 21.8% 증가한 4,230억원으로 대폭 확충되었으며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연구기반구축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국가 지정연구실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육성해야 할 핵심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역량을 지니고 있는 산·학·연의 우수연구

실을 국가지정연구실로 선정하여 5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99년에는 140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750억원의 예산으로 150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예산 대비 R&D 투자 비중을 99년 3.7%에서 4.1%로 대폭 높였으며, 투자규모로는 99년 3조1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12.9%를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과학기술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은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기술 개발을 통해 2010년까지 전략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0년도에는 500억원의 예산으로 5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은 국가적 연구개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국가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99년 대비 2.5%가 증가한 1,6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액계상 예산으로 편성하여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신속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에 걸쳐 특정제품 및 기반기술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고선명TV 개발, 256M DRAM개발, 신의약·신농약 개

발, 복제송아지 영롱이 개발 등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현재 15개 사업을 계속 수행중에 있다. 동 사업은 종료연도가 가까워 옴에 따라 점차 민간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정부 지원은 축소되고 있어 2000년도 예산은 99년 대비 26.7%가 감소한 711억원으로 편성되었다.

### 기초과학 진흥 및 창의적 인력 양성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융합화 현상 및 전통적인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경계가 무너지고 대학의 연구결과가 곧바로 산업화로 이어지는 등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98년도 기초과학 연구수준은 SCI 논문게재 기준으로 볼 경우 세계 16위로 최근 5년간(94~98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0년도의 기초과학연구비는 99년 대비 7.4%가 늘어난 1,696억원으로 편성하여 첨단기술개발의 원천인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먼

저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을 특정 분야별로 조직·체계화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선도과학자 그룹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수연구센터(SRC, ERC)사업은 99년보다 6억원이 늘어난 443억원으로 2000년도에 지원이 종료되는 17개 센터의 교체·선정을 포함 총 50개 센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대학의 우수 연구자원과 지역특화 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99년 대비 15.6%가 증가한 185억원으로 37개 센터에 대해 지원금액을 센터당 평균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기초연구사업은 99년 대비 41.0%가 증가한 70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하였으며 과제당 지원액도 99

년의 5천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6,4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특성화장려사업, 방사광가속기 운영 등 대형·첨단연구장비의 공동이용지원 및 연구기기·소재·정보 등의 기초연구인프라 사업도 99년 대비 5.2%가 증가한 243억원으로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일류 수준의 창조적 과학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0년에 총 8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 원자력 기술개발 고도화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

우리나라는 16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국내 총전력의 41.7%를 공급하는 세계 10대 원자력 이용 국가이다.

2000년에는 원자력이용 기술

개발사업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099억원과 정부출연금 300억원 등 총 1,399억원을 투입하여 일체형원자로설계기술개발, 가동원전성능향상기술개발, 핵연료기술, 방사성폐기물처리기술 및 원자력안전규제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보되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하고 창의적인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과학기술한림원 등 관련단체를 통하여 청소년과학활동지원사업,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학회 학술활동 지원사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내 개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제 시행, 정년조정, 퇴직금 제도 개선, 공정한 성과시스템 운영 등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하여 99년 대비 13.8% 증가한 1,567억원을 반영하여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표〉 2000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안)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감	비율
특정 연구개발사업	3,471	4,230(48.8)	758	21.8
· 핵심전략연구개발사업	1,650	1,692	42	2.5
· 선도기술개발사업	971	711	-260	-26.7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358	275	-83	-23.2
· 연구기반구축사업	292	109	-183	-51.1
· 과학기술국제화사업	201	192	-9	-4.5
· 국가지정연구실사업		750	750	신규
·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500	500	신규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	1,579	1,696(19.5)	117	7.4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300	300(3.5)	-	-
연구성과 지원사업	20	122(1.4)	102	510.0
국제과학기술 협력사업	13	17(0.2)	5	35.4
정책연구비	228	101(1.2)	-133	-55.8
출연(연) 육성지원	1,376	1,567(18.1)	191	13.8
기타 주요사업비	163	129(1.5)	-34	-20.8
인건비 등 경상경비	212	168(1.9)	-44	-20.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출금(국립중앙과학관)		88(1.0)	88	신규
과학기술진흥기금(재특)	450	250(2.9)	-200	-44.4
계	7,812	8,668(100.0)	856	11.0

註 : \*99년 예산은 연구회 소관 13개 출연기관예산(2,377억원)을 총리실로 이체 후 예산액임.

\*\*괄호 안 숫자는 구성비임.

# 정보화 부문 투자 강화

**세** 계는 지금 새 천년의 시평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주도경제' (Knowledge Driven Economy)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정부는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서 '사이버 코리아 21'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새로운 정보화의 물결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정보화에는 반드시 앞서 나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사이버 코리아 21'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여 국가·사회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담아 다른 분야에 비하여 훨씬 큰 비중으로 2000년도 정보화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00년도 정보화예산(안)은 정부 전체예산의 1.2%인 1조



형태근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장

530억원이다. 이는 경제난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98년부터 시작된 정보화근로사업 예산을 제외할 경우 99년 9,255억원 대비 13.8%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와 함께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정보통신 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 부문에 별도로 7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화예산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화여건 조성, 정보통신산업지원 등 정보화 기반구축 부문과 정부 각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부문 정보화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전국적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해 2,205억원을 투입할 것이다.

초고속국가망의 기간전송망을 전국으로 확충하고 전국 중소도시로 ATM교환기를 설치해 나갈 것이다. 99년까지 107개 지역에 연결된 기간전송망을 2000년 144개 모든 통화권역으로 확대 구축하고 ATM교환기 57식을 설치하기 위한 초고속국가망 구축예산 9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국과 가입자 간에 연결되는 초고속공중망 구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투자금으로 1천억원을 융자지원할 것이다. 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배분되어 광케이블망·ADSL망·CATV망·ISDN·무선·위성망 등 이용자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

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선행하는 시험망을 구축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교환·전송장비 및 단말장비, 응용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고도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체의 첨단기술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반회계로 52억원을 투입, 서울↔대전간 기간망을 10Gbps급으로 고도화하고 해외 선도시험망과의 연동시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보다 100~1,000배 빠른 차세대인 터넷 기반환경 구축을 통해 미래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망 인터넷의 증속(64Kbps→155Mbps), 국제회선의 확대(20Mbps→45Mbps), 인터넷 주소체계를 여섯 자리 주소체계로의 전환(IPv6) 등도 추진할 것이다.

2000년도 정보화예산(안)은 정부 전체예산의 1.2%인 1조530억원이다. 이는 경제난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98년부터 시작된 정보화 근로사업 예산을 제외할 경우 99년 9,255억원 대비 13.8%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선도응용시범사업과 중·저속통신망의 초고속환경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초고속망과 슈퍼컴퓨팅을 연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활용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58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129억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여러 시설을 통해 정보통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살펴보고 21세기 첨단사회의 모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전시관을 완공, 내년 6월 개관하게 된다. 또한 18억원을 투입,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보화를 확산하고 APII(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조기구축을 위한 지역간·국가간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을 위한 국민정보화교육사업을 위해 49억원을 지원하여 컴퓨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컴퓨

터 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추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체국을 이용한 정보화교육센터를 전국 50개소로 확충하고 정보화표준교육교재 4종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정보화교육강사 모집 및 소양교육을 통해 1천명 규모의 인력풀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학교·지자체 등의 정보화교육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PC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중고PC를 수집·수리하여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정보취약계층에 1,600대를 보급할 것이다.

### 정보화 여건 조성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적합한 정보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161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구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발굴하여 정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표 1〉 한·미·일 정부예산 중 정보화부문 예산 비중

(단위 : %)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미국	1.69	1.74	1.69	1.64	—
일본	0.59	0.63	0.70	0.76	—
한국	0.65	0.71	1.03	0.94	1.39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회원단체 중심의 정보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등 정보문화 확산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컴퓨터 불법해킹 등 침해사고 억제를 위한 정보보호센터 운영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서명 인증센터 운영지원, 음란·폭력 등 불건전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컴퓨터 2000년 문제(Y2K) 해결 및 비상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풀 운영과 기술지원을 위해 6억5천만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의 Y2K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50억원을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분야별 정보화의 지원으로 국가사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57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다수 부처간 연계나 전문기술적 고려가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전략적 지원과 정부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對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응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320억원을 투입할 것이다.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역간 연계 및 파급효과가 큰 정보화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정보화촉진을 지원하고 조달EDI 등 공공정보 중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정보화센터 운영, 정보공동활용 지원 및 정보화통계의 관리 등을 위해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보화근로사업은, 고학력 실업자들의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고, 이들의 재취업·전직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정보사회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정보통신 분야의 인력양성을 강화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통해 국가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1,043억원이 편성되었다. 고용효과와 정보화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 3~12월까지 1일 6천여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민원서비스 개선효과가 크고, 공동활용이 시급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화를 우선 추진하고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해 통합서비스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다.

### 정보통신산업 발전 지원

21세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통신산업 지원을 확대하여 소프트웨어·정보제공산업 등 핵심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본격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615억원을 지원하고 370억원을 재정융자할 계획이다.

먼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산업인 소프트웨어 및 정보제공산업의 지원을 위해 22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정보제공(IP)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우수 콘텐츠의 발굴 및 영문IP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70억원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전주·춘천에 이어 부산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서울소프트타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85억원을 배정하였다. 지식정보사회의 유망산업 분야인 게임산업의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소프트웨어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각 지역별 성장거점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업체를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연계하

〈표 2〉 초고속정보통신전시관 건립비 예산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1,366	2,594	6,800	12,928

는 실리콘로드 프로젝트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36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성장거점인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서울소프트타운 등 창업·육성지원시설을 확충하고 IMF 위기 이후 침

체된 소프트웨어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의 교두보인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확충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정보화

공공부문 정보화는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화 추진을 위해 2000년에는 6,714억원을 반영하여 99년 대비 25.0% 증액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를 위한 공공부문 정보화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예산 사전조정반을 운영하여 정보화 분야의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유사분야의 연계·통합을 강화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하였다.

공공부문 정보화는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화 추진을 위해 2000년에는 6,714억원을 반영하여 99년 대비 25.0% 증액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분야는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을 정보화로 뒷받침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425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 행정의 투명성 제고,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관련기관간 중복투자 방지 등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둘째,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2,963억원을 반영하였다. 사회간접자본, 산업, 수출·입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첨단교통정보시스템(ITS)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NGIS)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였다.

셋째, 교육·환경·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분

야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32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교육부문은 기기보급, 교원컴퓨터활용능력 활성화,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고 구축된 기반의 활용에

역점을 두어 지원토록 하였으며 환경·국가안전관리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은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정보화를 가속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정보화 기반 구축 및 각 분야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정보화분야 투자를 계속 강화함과 동시에 동일·유사업무의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간 연계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이버 코리아 21'에 제시된 목표와 중점실천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지원하여 국가사회 정보화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 미래 지향형 교육투자



우 리 교육은 건국 이후 50여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 없는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교육의 양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학교현장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8년까지 교육투자를 GNP 대비 5%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97년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로 인한 급속한 국내경기 둔화로 40만 교육가족과 온 국민이 크게 기대했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이제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교육개혁 추진 노력을 게을리 하면 지식기반사회의 선진국 대열에서 영원히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앨빈 토플러는 한국사회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한국의 경제위기는 교육의 실패 때문이었다. 창의력 함양과는 거리가 먼 죽은 교육이 외환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의 부재 원인으로 작용



**황인철**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

하였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 개인의 소질 및 특기 개발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역점 뒤

다가오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두뇌활용 중심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 국가발전의 진운을 결정할 핵심산업으로 대두될 것이다.

국경 없는 지구촌에 지식·정보의 급증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사이버공간(cyber space)의 출현은 기존 교육의 내용·방법·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전면

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21세기에 개인의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정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초·중등교육 분야는 교육과정 운영을 개인차를 존중하는 학생선택의 교육과정으로 개정 운영할 것이다. 1~10학년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11~12학년은 학생선택 및 심화교육과정으로 개정된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으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화가 필요하고, 학생중심의 다양한 학습활동 전개로 열린교육 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학습 방법이 다양화될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는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대학원의 집중육성으로 국가경쟁

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대학을 특성화하여 다양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화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대학'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며,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한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평생 및 직업교육 분야는 학교와 직장 그리고 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기회의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교육과 산·학·연 협력체제가 활성화되고, 학력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직업교육의 내실화가 강화된다.

실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연

2000년도 교육예산 규모는 99년보다 6.6% 늘어난 19조788억원이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5.0%보다 1.6%p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정부예산보다 1.0%p 높은 12조56억 원(4.6% 증가)이며, 특별회계는 99년 대비 10.1% 증가한 7조732억원이다.

계하는 교육과정운영과 비교우위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의 중심이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으로 전환된다.

**2000년 교육예산은 99년보다 6.6% 증가한 19조788억원**

새로운 천년을 여는 첫해인 2000년도 교육예산(안) 규모는 99년보다 6.6%(1조1,758억원)이 늘어난 19조788억원이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 5.0%보다 1.6%p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정부예산보다 1.0%p 높은 12조56억 원(4.6% 증가)이며, 특별회계는 99년 대비 10.1% 증가한 7조732억원이다.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첫째,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였다. 유아교육의 균등한 기회부여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소득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저소득층의 만 5세아 자녀들의 유치원학비를 전액지원할 것이다. 전국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700명과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자녀 2만700명이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표 1〉 2000년 교육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1998년 예산	1999년 예산	증감률	2000년 예산(안)		
				증가액	증감률	
일반회계	120,564	114,765	-4.8	120,056	5,291	4.6
특별회계	54,297	64,265	18.4	70,732	6,467	10.1
합 계	174,861	179,030	2.4	190,788	11,758	6.6
중앙교육재정·사업비	28,851	29,768	3.2	31,121	1,353	4.5
지방교육재정	146,010	149,262	2.2	159,667	10,405	7.0
정부예산	807,629	884,850	9.6	929,200	44,350	5.0
· 일반회계	755,829	836,851	10.7	867,364	30,513	3.6
· 재정융자	51,800	47,999	-7.3	61,836	13,837	28.8

註 : \* 정부예산 98~99년도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및 도시 자영업자 중·고생 자녀 40만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중학생은 16만명으로 1인당 평균 62만원, 고등학생은 24만명으로 1인당 평균 92만원의 학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연 300만원의 학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이자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던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다. 상환방법도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단기는 대출 익월부터 2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장기는 군복무 3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졸업후 7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세계수준의 '대학원 집중육성'과 '지역대학 특성화'를 통해 차세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두뇌한국 21' 사업에서 대학(원)생 등에게 공부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생활비 및 기숙사비로 매년 1,400억원 수준을 지원할 것이다.

한편, 결혼가정 및 빈곤가정 자녀 15만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하

도록 하였다. 학기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청소년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둘째, 초·중등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99년도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5.4명이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8.6명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개성존중의 특기·적성교육 등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창의적 교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등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으로 낮추기 위하여는 1,100개 학교를 신설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9조9,200억원이다.

내년도에는 초·중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3천억원을 국고에서

신규반영하였으며, 앞으로 5년간 1조원을 재정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통합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2천억원을 반영하여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교실 및 강당 등 교육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2000년도에 마무리된다. 96년부터 5년간 매년 1조원씩 투자하는 환경개선사업은 교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교실을 개축하며, 화장실 및 난방·급수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투자되었다.

교육정보화는 초·중고생의 컴퓨터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초·중등학교에 학내전산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학내전산망구축 사업을 97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00년에는 2,500개 학교에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며, 최소한 1학교 1컴퓨터교실 설치를 완료할 것이다. 학생생활기록부를 비롯한 학사업무를 전산처리하는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체제 구축 사업도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2000년에는 2,478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용 장비 및 프로그램을 보급할 것이다.

교원을 증원하고 처우 개선

셋째, 교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표 2〉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5.4	38.9	46.2
교원 1인당 학생수	28.6	20.3	21.4
※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국가, 95년)	18.8	16.9	14.2

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우수교원의 확보와 교원의 사기진작이 요청되지만 교직사회는 정년단축 및 보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내년에는 교원처우 예산을

금년보다 10% 수준 인상하고, 신규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을 1,386명 증원하며, 담임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하였다(2002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

IMF사태 이후 2년간의 기본급동결 및 보수삭감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125%에서 250%로 확대하며, 기본급을 3% 인상하고 하반기중 추가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3%를 정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가족수당을 배우자는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부양가족

2000년도 교육예산(안)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초·중등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교원의 증원과 함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교육 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수당은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 대학교육 개혁 적극 지원

넷째, 대학교육 개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고도로 분화된 미래사회에 적응력이 높은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대학을 특성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연구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 연구에 중점을 둔 세계수준의 대학원 집중육성 지원과 특성

화된 지역대학을 연계운영하는 '두뇌한국 21' 사업(99년부터 매년 2천억원씩 7년간 총 1조4천억원 투자)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소요액 2천억원을 반영하였다.

우리의 교육·연구 여건은 '세칭' 일

류대학조차 세계 주요대학의 1/4~1/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 연구능력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여 2002년까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수를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 등 다양한 학문의 연구·진흥을 위한 학술연구조성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200억원이 증액된 1,200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국·공·사립대학의 대학경영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한 대학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추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전문대학도 대학별 비교우위의 교과과정 육성을 통한 특성화를 추진하고 현장적응력이 높은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업계 전문대학 육성, 주문식 교육,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현장실습비 지원 등에 1,600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3〉 중앙교육재정 對 지방교육재정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예산액	증감	증감률
중앙교육재정	2,976,795 (16.6)	3,112,136 (16.3)	135,341	4.5
· 사업비	1,979,555 (13.3)	2,016,867 (10.6)	37,312	1.9
지방교육재정	14,926,192 (83.4)	15,966,726 (83.7)	1,040,534	7.0
합 계	17,902,987	19,078,862	1,175,875	6.6

註 : 괄호 안 숫자는 구성비임.

## 교육재정 지속적 확보와 효율화 제고

내년도 교육예산구성비를 살펴보면, 국가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16.3%인 3조1,121억원이며, 지방교육재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83.7%인 15조9,667억원이다. 교육예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총액의 11.8%인 경상교부금과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세부담률 제고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장치

없이 교육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확보된 교육재정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짐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교육부문의 생산성이 취약하고 경쟁풍토 조성이 미흡하며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하였다.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전체예산의 74.7%(99년 예산)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의 인건비 증가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불

가피한 면도 있으나, 인건비 증가를 수반하는 정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이다. 농어촌지역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등을 통해 학교운영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학교시설을 공공시설·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비 단가를 98년 기준 15~20% 절감하였다. 국립대학의 경우도 보직 감축, 학과 통합 등을 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방식을 지양하

고 행정·재정 지원을 통한 자발적인 개편노력을 유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방식의 경쟁 원리 도입이다. 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대응 투자노력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 등 교육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차등지원함으로써 선의의 경쟁풍토를 조성하여 지원효과를 높일 것이다. ■

〈표 4〉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예산액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11,476,535	12,005,635	529,100	4.6
·국고	2,842,075	2,962,629	120,554	4.2
-인건비	775,888	864,076	88,188	11.4
-기본사업비	221,832	231,193	9,841	4.4
-주요사업비	1,844,835	1,867,360	22,525	1.2
·지방교육재정	8,634,460	9,043,006	408,546	4.7
-봉급교부금	2,553,323	2,819,834	266,511	10.4
-경상교부금	5,656,147	5,967,172	311,025	5.5
-증액교부금	424,990	256,000	-168,990	-39.8
특별회계	6,426,452	7,073,227	646,775	10.1
-재정융자	963,560	1,060,822	97,262	10.1
-국유재산관리	50,660	55,287	4,627	9.1
-농어촌특별세	20,500	33,398	12,898	62.9
-지방교육양여금	4,691,732	5,223,720	531,988	11.3
-교육환경개선	700,000	700,000	-	-
합계	17,902,987	19,078,862	1,175,875	6.6

註 : 99년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 문화 · 관광산업의 진흥

##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문화예산 1% 달성

일

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는 정부내 정책 우선순위에서 항상 뒷자리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15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문화예산 1%를 2000년 예산(안)에서 실현하였다.

문화예산 1%는 정부수립 이래 우리 문화정책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일로서, 정부가 문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99년 국정지표로 '문화 · 관광의 진흥'을 채택한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문화예산 1%는 특히 새 천년을 여는 첫해인 2000년도에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문화의 시대' 개막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상징적 의미 외에 문화예산 1%는 실질적인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예술 창작활동 속에 국민



이서해

문화관광부 기획예산담당관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복지사회 구현의 토대와 문화 · 관광산업을 국가기간산업화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은 부가가치와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면서도 고용창출효과가 뛰어나다. 2000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은 문화복지사회 구현 및 문화 · 관광산업의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다.

문화관광부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602억원, 특별회계 51억원으로 총 8,653억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24.6%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예술부문 예산은 금년보다 765억원이 증액된 4,032억원이며(증가율 23.4%), 문화산업 부문은 811억원이 증액된 1,782억원(증가율 83.5%), 관광산업 부문은 250억원이 증액된 1,039억원(증가율 31.7%)으로 편성하였다.

### 문화산업 예산, 영상 및 게임산업에 집중투자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 분야를 먼저 중점 육성하여 타분야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삼는다는 구상으로 2000년도에 금년보다 811억원이 증액된 총 1,782억원을 편성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문화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98년 기준 시장규모가 약 18조원으로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하여 GDP의 약 20~30%대를 차지하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정부는 문화산업이 가지는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에 주목하고 이를 21세기 국가 발전을 주도할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우선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문화예산 1%가 달성되었다.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정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문화산업을 수출산업 및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개발 육성할 것이다.

영화 '취리'의 경우 제작비 37억 원을 들여 약 166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게임 '대물뉘시광'의 경우 제작비 5억원으로 85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 외에도 문화산업은 우리의 '문화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적극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2000년도 문화산업 분야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83.5%라는 대폭의 증액과 함께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영상 및 게임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요약될 수 있다.

영상산업 분야에서는 경제위기 에 따른 위축을 극복하고 우리 영화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 100억원이던 영화진흥금고 출연 투자재원을 금년에 5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하고, 영상벤처 센터의 지방확충에 60억원 및 애니메이션 센터 설립에 124억 원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게임분야에서는 금년 개소한 서울 구의동의 게임지원 센터에 이어 제2의 게임센터를 용산에 설립하기 위해 50억원, 게임 해외진출 지원 등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다. 음반 분야에서는 디지털 녹음실, 창업안내실 등을 갖춘 '음반산업 지원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132억원, 한국가요 해외홍보지원 등 음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한다.

출판 분야에서는 우수도서 출판육성에 22억원, 만화출판산업 육성에 3억3천만원 및 청주 국제인쇄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 25억원을 편성하였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는 해외위성방송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31억원을 투입하여 공예공방 등 문화상품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캐릭터산업 육성을 위해 5억5천만원, 한복산업에 2억1천만원 및 패션디자인 산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2003년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 5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국고에서 5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벤처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투자회사의 설립을 장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의 성패는 창의력이 높은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임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아

〈표 1〉 2000년 부문별 문화관광부 예산(안)

(단위 : 억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	감률
문화관광부 (a)	6,943	8,653	1,710	24.6
· 문화부문 (b)	5,027	6,853	1,826	36.3
- 문화예술	3,267	4,032	765	23.4
- 문화산업	971	1,782	811	83.5
- 관광	789	1,039	250	31.7
· 체육, 청소년부문	1,916	1,800	-116	-6.4
문화재청 (c)	1,620	2,462	842	52.0
문화예산 (b+c)	6,647	9,315	2,668	40.1



카데미'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분야별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산·학 연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관광산업예산은 문화관광자원 확충에 집중 투입

관광산업은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효과면에서 아주 뛰어난 미래형 산업이다.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은 87.2%로서 승용차·반도체보다 높고, 외래관광객 1명을 유치할 경우 21인치 컬러 TV 9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능가한다. 또한 관광산업 취업자는 현재 200만명이 넘어 전체 취업자의 10%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래 관광객이 지출하는 1천만원은 1.4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갖고

있다.

아울러 관광산업은 98년 37억 달러의 흑자기록에 이어, 금년 내국인 출국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2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0년도 관광산업 진흥예산

### 〈표 2〉 문화산업부문 예산(안)

(단위 : 백만원)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문화산업지원센터 조성 지원	11,800	43,900	32,100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	50,000	50,000	-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2,922	4,192	1,270
영상산업 육성	19,423	56,132	36,709
음반산업 육성	417	1,309	892
출판·신문산업 육성	8,134	9,756	1,622
방송산업 육성	-	5,000	5,000
문화상품 개발 육성	1,197	4,424	3,227
기타	3,207	3,487	280
계	97,100	178,200	81,100

은 1,039억원으로 올해 789억원에 비하여 31.7%인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내년도의 관광산업 예산은 특색 있는 문화관광 자원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와 고용 확대 효과를 도모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한국적 특성을 갖춘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부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남해안

일대를 문화·관광 벨트화하는 사업에 417억원, 경북 북부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유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에 85억원, 전국 60개 관광지 조성 지원을 위해 271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세계 170여개국에 5천만 명 정도의 태권도 인구가 있는 점

에 착안, 전세계 태권도인의 성전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1차 연도인 내년에 10억 원을 반영하였다.

한편 소설 「도지」의 무대인 하동 최참판댁 재현 등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에 63억6천만원, 활공장 등 관광레포츠 시설자원 확충에 21억5천만원, 갯벌관광지 개발 등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12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세계시장을 권역별로 나누어 특성 있는 판촉활동을 벌이는 외래관광객 유치홍보사업에 30억원을,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 3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문화유적지 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국문화관광지도를 개발하는 데 5

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도 관광기념품이 천편일률적인데, 이를 지역별로 특화시켜 나가는 작업에 4억1천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무형문화재 작품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여 전시·판매하는 공간을 지난 9월 명동에 마련한데 이어 앞으로 박물관 소장유물 등에서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유물의 문양 및 모형을 문화상품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의 2000년도 세출예산은 총 8,653억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24.6%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화예술 부문은 765억원이 증액된 4,032억원, 문화산업 부문은 811억원이 증액된 1,782억원, 관광산업 부문은 250억원이 증액된 1,03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우리의 문화·관광산업은 2000년 문화예산 1% 달성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화산업의 발전이 단지 산업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창의성, 예술적 감성이 뒷받침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활발한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이 펼쳐지고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한다.

관광산업 진흥도 숙박시설·위락시설·볼거리만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의 독특한 맛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정직하고 친절할 서비스로 포장하여야만 이루어낼 수 있다.

다행히 우리는 중국문화의 오랜 영향하에서도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문화를 가꾸어 온 전통이 있으며 훌륭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 문화적 창의력, 따뜻한 친절함을 갖고 있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다. 이런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문화·관광산업의 국가간산업화'를 조기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표 3〉 관광산업부문 예산(안)

(단위 : 백만원)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원	29,917	42,214	42,214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	41,696	41,696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	8,507	8,507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	—	6,150	6,150
문화관광축제 지원	—	1,650	1,650
관광진흥개발기금	40,000	—	-40,000
기타	8,983	8,479	-504
계	78,900	103,900	25,000

#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삶의 질' 향상

생

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동시에 자립적·주체적인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이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일할 수 있는 복지(welfare to work)를 실현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2000년대 복지국가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비전에 따라 2000년도에는 최저생계 이하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자활을 촉진하고, 노인·장애인·아동·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확대하며,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의료기반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을 추진



이계웅

보건복지부 기획예산담당관

해 나갈 계획이다. 2000년도 보건복지예산(안)은 이러한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0년도 보건복지예산(안)은 99년보다 7.0%가 증가한 4조7,534 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보다 8.1%가 늘어나서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5%선을 넘어서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예산 규모는 최저 2.18%(1981년)

에서 최고 4.97%(1999년)까지 점진적으로 증액되어 왔으나 한번도 5%선을 상회한 적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확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사회복지 증진 예산 크게 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민단체·정당·정부 등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제206회 임시국회(99.8.12)에서 통과되었으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생계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수급권자의 권리성과 빈곤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

우선, 중전의 거택보호와 자활

보호의 구분이 없어지고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생활보호가구(64만1천가구)에 대해 월 2만8천원

씩의 주거비를 신규 지원하며, 기초생계비·학비·의료비를 포함한 총 지원수준은 1인당 월 17만8천원에서 월 20만5천원으로 증액된다.

다만,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76만명에서 54만명으로 22만명이 감소됨에 따라 생활보호예산은 5.8% 감액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2000년 10월부터는 생계비 지급대상자가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확대되며, 주거비 신설 등에 따라 2001년 생활보호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2000년도 보건복지예산(안)은 최저생계 이하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자활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확대하며,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의료기반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4개 특별회계를 포함 99년보다 7.0%가 증가한 4조7,534억원이 계상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4,200명에서 4,800명으로 600명을 증원하고 전문요원을 보조하기 위한 공공근로인력 4,200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달동네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운영중인 자활지원센터 20개소 외에 사회복지관 등 민간복지조직을 활용하여 소규모 자활지원센터 50개소의 설립을 추가로 지원한다.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

장·편부모가정 등의 기본적 생계 보장과 일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2000년 취약계층 지원예산은 99년보

다 25.7%가 늘어난 7,078억원이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2003년까지 85만9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선 2000년에 5만5천명을 늘려 총 71만5천명에게 연령과 생활정도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경로식당 673개소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연인원 1천만명의 결식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범주를 만성 심장·신장 및 정신질환까지 확대하고 장애수당도 1만6천명이 늘어난 7만7천명에게 지급하며 장애인자립자금도 60억원 늘려 180억원을 가구당 최대 1,2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한다. 또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편의시설촉진기금이 출연금으로

〈표 1〉 2000년 보건복지예산(안)

(단위 : 억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일반 회계	41,611	44,981	3,370	8.1
국립의료원 특별회계	559	611	52	9.3
재정융자 특별회계	1,020	930	-90	-8.8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945	868	-77	-8.1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91	144	-147	-50.5
계	44,426	47,534	3,108	7.0

조성되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처음으로 지방인 인천에서 개최되도록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을 포함한 저소득층 자녀 12만8천명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수준은 월 5만원에서 6만 5천원으로 인상한다.

그 밖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시설이 28개소에서 93개소로 크게 확충되고, 화장실을 제고를 위해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예산도 92억원에서 121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장애인

의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 근무자를 우수 인력으로 확보하고 보호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설에 따라 최저 3%에서 최대 12%까지 운영비를 인상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의 상실 및 감소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1992년 1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에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드디어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전국민연금 시대가 도래하였다.

전 국민 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총 소요액 중 자체수입액을 제외한 50% 수준인 1,166억원을 일반회계와 농특세회계에서 지원하며, 2000년 7월부터 연금보험요율이 3%에서 4%로 인상됨에 따라 농어민 97만1천명에 대해 월 2,200원을 지원하던 것을 3,000원으로 인상하여 농특세회계에서 지원한다.

### 국민의료기반 확충 및 신약개발 투자 확대

2000년 7월부터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한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비 30억원이 편성되었다.

암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전문적 암연구를 위해 국립암센터 연구동이 2001년까지 총 사업비 307억원을 투입하여 4천평 규모로 건립되고, 2000년 10월에는 일산 암센터가 개원하게 된다.

또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8개소)와 각 지역 응급의료병원을 통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의료예산이 35억원이 편성되었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설치운영중인 장기이식정보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확대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되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제약산업의

〈표 2〉 사회복지예산(안)

(단위 : 일반회계 기준, 억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	감
생활보호	11,353	10,687	-666	-5.9
복지서비스	5,629	7,078	1,449	25.7
국민연금	729	771	42	5.8
계	17,711	18,536	825	4.7

〈표 3〉 취약계층 복지예산(안)

(단위 : 일반회계 기준, 억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	감
노인복지	1,956	2,643	687	35.2
장애인복지	1,126	1,444	318	28.2
보육아동사업	1,726	1,963	237	13.7
여성복지및부모자 가정	169	220	51	30.7
기타 사회복지	652	808	156	23.9
계	5,629	7,078	1,449	25.7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기술개발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위해 전년대비 28.1%가 늘어난 534억원의 신약 개발비가 투입된다.

### 의료보장 예산 12.5% 증액

2000년에는 지역의료보험 조합별 분리운영방식을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의 극대화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적정급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보험이 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생계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수급권자의 권리성과 빈곤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

합될 예정이다.

보험료 인상률보다 보험급여가 더욱 크게 늘어나는 등의 요인으로 단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의료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13.5%가 늘어난 1조 3,227억원을 투입한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

료보험에 대한 정부 부담보험료는 99년 3월에 보험료율이 4.2%에서 5.2%로 인상되고 부과범위가 제수당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6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생활보호대

상자 감축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 수는 212만8천명에서 191만6천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의료보호 예산은 1.6% 감액된 7,969억원이 반영되었다.

한편, 급여기간을 330일에서 연중으로 확대하고 산전진찰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해 195억원을 확보하였다.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며, 국민들이 평생 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재정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정부재정이 현재보다는 좀더 많이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2000년에 보건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5%선을 상회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

〈표 4〉 국민의료기반 확충 및 국민건강증진 예산(안)

(단위 : 일반회계 기준, 억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	감
보건	1,212	1,104	-108	-8.9
의정 및 한방	597	532	-65	-10.9
식품·약품	17	36	19	111.8
보건의료기술	416	490	74	17.9
기관운영 등	77	86	9	11.6
계	2,319	2,248	-71	-3.0

〈표 5〉 의료보장 예산(안)

(단위 : 일반회계 기준, 억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	감
의료보험	12,527	15,235	2,708	21.6
의료보호	8,098	7,969	-129	-1.6
계	20,625	23,204	2,579	12.5

# 산업기술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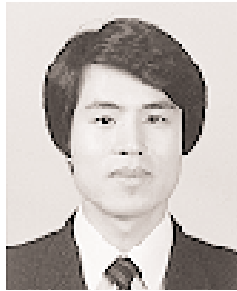
21

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에서는 '지식과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 및 기술의 창출과 이를 지원하는 혁신인프라의 구축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 R&D 투자 미흡하고 기술수준도 취약

2000년도의 산업기술예산의 운영방향은 이러한 기본관점에서 정부가 산업기술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여 민간의 R&D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3.7% 증가한 7,907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이 발전해 오



문선목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서기관

면서 산업의 기술수준도 향상되어 왔고 정부의 R&D예산도 많이 증대되었다. 특히, 중전 업종별 지원시책에서 80년대 후반 기술개발·생산성향상 등 산업에 대한 기능별 지원시책으로 전환하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가 급속히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80년대초 3천억원 미만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가 97년에는 12조2천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정부의 R&D 예산도 80년 3억달러 미만에서 금년에는 26억달러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의 기술수준

도 많이 향상되었는데 반도체·조선 등 일부품목의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고, 특허출원도 80년 5천건에서 98년 9만건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기술개발투자 및 기술인프라 수준이 취약하여 창조적인 기술혁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R&D투자가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아직도 절대·누적 규모(Stock)는 선진국의 5~10% 수준에 불과하고, 주요 산업별로 핵심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4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개발활동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기술하부구조는 미국의 1/20, 일본의 1/11 수준에 불과하고, 종합적인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5~10%로서 크게 열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력이 아직도 열위에 머무르고 있는 요인은 R&D투자규모 및 정부지원이 아직 미천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인 R&D를 뒷받침하는 기술인프라가 취약하고 기술개발 자원의 연계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박사급 이상 고급 인력의 77%를 보유하고 기업은 R&D투자의 73%를 수행하

는 등 기술개발주체간에 R&D 자원배분이 불균형적인 반면, 이들간의 상호 연계·협력체제가 미흡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술평가·거래시장이 미성숙되어 있다. 또한 기술·자본·인력·정보 등 기술개발자원을 집적화하여 활용하는 체제가 미흡하고,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체제는 급변하는 산업계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산업기술혁신을 위해 올해보다 13.7% 증가한 7,907억원 반영

정부는 취약한 우리 산업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21세기 새로운 경제환경의 전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사업구조조정 조속한 마무리, 효율적인 기술혁신체계의 구축,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2000년도 산업기술예산의 운영방향은**  
정부가 산업기술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여 민간의 R&D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체제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3.7% 증가한 7,907억원에 이르고 있다.

있어 우리 산업이 생존·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산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 R&D 투자 확대와 기술인프라 확충에 예산운영의 중점 뒤

우리 정부는 산업기술정책의 목표를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 구축'에 두고, 핵심기술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R&D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데 예산운영의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의 R&D자금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성장유망 기술분야에 '선택

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집중지원해 나갈 것이다. 2000년 예산(안) 중 3,600억원에 달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공정·부품·시스템 등의 복합기술

및 21세기 미래산업을 주도할 차세대 핵심기술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특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부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는 2000년 예산(안) 중 1,400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기술연구집단지화사업을 통하여 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TIC),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등 기술개발가용자원을 결집하여 활용하는 지역기술

〈표 1〉 기술개발투자 및 성과 추이

	80년	97년
R&D투자(10억원)	283	12,286
R&D투자/GDP(%)	0.77	2.89
R&D예산(억달러)	2.78	26.5(99년)
연구원수(천명)	18.4	137.5
기업부설연구소 수	54	3,060
종합적인 기술개발력*	1.36	6.55(94년)
특허출원건수	5,070	92,734
기술수출액(억달러)	0.06	1.6

註: \* 미국=100

거점을 확충하고, 전자상거래·정보화·표준화 등 지식기반인프라 조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산업기술개발사업에  
3,100억원 지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총 3,1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산업기술수요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내산업의 공통적 핵심기술 분야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서 민간의 자주적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발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학·연 전문가의 기술수요 조사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핵심기술과제를 발굴하여 2~3년내 개발을 지원하는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3분의 2 이내에서(벤처기업 75% 이내) 과제당 연간 3

억원까지 지원한다.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주력산업의 핵심공정·부품·시스템 등 핵심복합기술들을 기업간 기술 제휴 및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5년 내외에 일괄개발을 지원하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은 총사업비의 3분의 2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20억원씩 5년간 평균 1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은 '2010년 기술예측조사'(98.7)에서 도출된 신소재·정밀화학 등 103개 미래핵심 신기술과제를 중심으로 상용화시기를 예상하여 우선 시급한 기술과제를 선정,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 내외로 과제당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며, 향후 5년간 정부출연 4,300억원, 민간부담 5,700억원 등 약 1조원 정도의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국 수준 진입을

뒷받침할 미래첨단 기술개발을 위해 10년간(1992~2001년)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첨단생산시스템개발(100억원), 차세대자동차개발(110억원), 차세대평판표시장치개발(168억원), 초소형정밀기계개발(45억원) 등에 지원된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800억원을 계상하였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업종별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을 지원(490억원)하고, 산업현장 수요중심의 전문기술인력양성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양질의 산업정보화·표준화를 지원(310억원)한다. 지원방식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3~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당해연도 총사업비의 75%(인력양성 60%) 이내에서 정부는 공동연구장비, 시험생산시설(Pilot-Plant), 교육기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지자체)은 재료비 등 운영비와 부지 및 건축비 등을 부담하게 된다.

기술연구의 집단화 사업은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 등 지역기술거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590억원이 지원된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기술혁신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정보교류시설, 교육훈련시설, 창업보육시설, 시험생산시설 등을 집적

〈표 2〉 주요국과의 기술수준 비교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R&D투자(97)	6	100	67	23
기술개발력지수(94)	6.55	100	70.19	46.3
과학기술경쟁력 순위(99)	28	1	2	

〈표 3〉 주요 분야별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 수준

전자·정보통신	생물·정밀화학	환경·중진기기	생산·자동화
60	49	48	5

註 : 세계수준 = 100

시켜 신기술개발 지원 및 지역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7년부터 안산·송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등 전국 6개소에 단지조성을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150억원이 지원되며 향후 5년간 2만여개 벤처창업의 산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기업의 창업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지역기술혁신센터(TIC)를 설치하여 지방기업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장비비용, 산업인력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센터의 장비구입비를 5년간 지원하고, 대학 등 민간은 센터운영비와 공간을 제

정부의 R&D 자금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성장유망 기술분야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집중지원해 나갈 것이다. 기술인프라의 확충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기용자원을 결집하여 활용하는 지역기술거점을 확충하고, 지식기반인프라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공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6개의 TIC가 설치되어 있으나 99년 중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0년에는 2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은 창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수 기술인력에 대하여 시제품 개발자금과 창업에 필요한 공간, 인력, 정보 등을 종합제공함으로써 우수 기술인력의 신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40억원이 지원된다.

첨단기술제품 및 자본재 시제

품 개발사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기술제품 개발과 기계류·부품·소재 등 자본재산업의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 7.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첨단

기술제품개발에 614억원, 자본재시제품개발에 2,286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산업기술예산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기술개발자금은 상업화가 가능한 핵심기술과제 중심으로 하여 그간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전 연구기획과정을 거쳐 선정·평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테크노파크·지역기술혁신센터 등 기술인프라사업

도 상호 비교평가와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

〈표 4〉 2000년 산업기술 예산(안)

(단위 : 백만원)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비 고
산업기술개발 사업	238,500	310,000	71,500	일반회계(출연)
선도기술개발 사업	49,150	50,700	1,550	"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63,788	80,000	16,212	"
기술연구집단지 사업	54,000	59,000	5,000	"
산업기술대학	3,464	1,000	-2,464	"
첨단 및 자본재 시제품 개발 사업	286,700	290,000	3,300	재특회계(융자)
합 계	695,602	790,700	95,098	

# 농업 · 농촌의 재도약

올

해는 전체 국가경제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농업부문도 '농업 · 농촌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등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 2000년 예산(안), 올해보다 2.4% 늘어난 7조1,258억원

올해의 농정은 지난해 IMF로 인한 당장의 농업경영 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농업기반공사 설립, 협동조합개혁 추진, 농림분야 규제개혁 등 과감한 농정개혁의 추진과 「농업 · 농촌 투자 실천계획」의 확정 등 농업 · 농촌 재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농업 관련조직의 개혁 지원, 농산물유통 개혁의 본격적 추진, 수출확대를 통한 농업의 활로 개척,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확산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



정 승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함에 있어서는 경제위기 이후 아직까지도 농가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사회의 불안요인인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조직을 농업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농업 관련 조직의 개혁 및 유통구조 개혁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 결과 2000년도 농림부 예산(안)은 7조1,258억원으로 올해보다 2.4%가 늘어났다.

이 중 사업비는 총 7조88억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2.4% 증가된 모습이며, 기본적 경비는 1,17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업비 중 투융자 사업비는 3조 8,485억원으로 올해보다 4.1%가 늘어난 규모이며, 양곡지원비 등 경직성 경비는 총 3조1,603억원으로 금년 대비 0.4% 늘어났다.

농림부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조7,773억원, 농특회계는 5조1,495억원, 재특회계는 1,990억원이다.

사업비를 수혜자별로 보면, 농업분야 SOC 사업에 31%에 해당하는 2조1,822억원,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는 24%에 해당하는 1조6,884억원,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9.8%인 6,859억원, 기타 채무상환 등에 2조 4,5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방법별로 보면, 보조는 총 투융자예산의 43.8%에 해당하는 3조719억원, 융자는 20.0%에 해당하는 1조4,027억원, 기타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 등에 2조 5,342억원(투융자액의 36.2%에 해당)으로 되어 있다.

농업 관련조직의 개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축협 등 협동 조합을 생활권·경제권 중심으로 합병을 촉진하고 중앙회 통합으로 전산기종이 바뀌는 일선축협의 전산비용 및 통합설립 준비 관련 예산 6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 합병 후 일선조합의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80개 조합에 25억원 수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천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한편,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 3개 기관 통합으로 신설되는 농업 기반공사의 자립경영 지원을 위한 출자예산을 400억원 반영하였으며, 조합비(수세)를 면제하여 연간 300억원의 농업인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조치하였다.

### 연대보증 해소 및 유통구조 개혁 등에 최우선

농산물 유통개혁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다.

농산물 유통단계의 축소, 중간 유통마진과 물류비 감축 등을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구조개혁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0년 유통부문 예산은 8,942

2000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아직까지도 농가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사회의 불안요인인 연대보증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조직을 농업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농업 관련조직의 개혁 및 유통구조 개혁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억원으로 99년 5,477억원 대비 63.3%(3,465억원)를 증액하여 전체 투융자 예산 중 유통예산 비중을 99년 14.8%에서 23.2%로 확대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비자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소비자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건설 계속사업비 301억원, 농산물공판장 건설 20억원, 도매시장에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예산 60억원(40개소)을 반영하였으며, 소비자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안기금 지원에 1천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산지에서부터 규격선별·공동출하가 가능하도록 산지 유통센터에 142억원을 반영하여 산지유통의 종합거점유통시설로 육성하고, 물류개선을 위해 하역기계화 및 파렛트와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표준화 96억원, 농산물 규격출하에 470억원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축산 분야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축산사업 추진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에 99년 대비 700억원이 늘어난 2천억원을 용자 지원한다.

농업인 연대보증 해소대책도 강구하였다.

최근 농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연대보증 피해를 차단, 농촌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대보증 부담완화 및 연체 채무 해소를 위한 특례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4,260억원을 확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98년말 출연금 누계 : 3,686억원)에 출연하게 된다.

연대보증으로 대출된 농업융자금 중 정상상환중인 6조4,800억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대신 보증하여 연대보증을 해소하게 되며, 이를 위해 적자재정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0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표2〉 참조).

재해에 대비하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가뭄·홍수 등 재해의 항구적인 개선대책을 위해 99년 추경에서 배수개선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00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2000년 예산에서도 계속 확

대 지원하기 위하여 배수개선에 2,181억원(113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2,470억원(366지구), 중규모 용수개발에 2,722억원(135지구) 등 8,632억원을 반영하였다.

### 농업·농촌 재도약을 위한 정책 본격 추진

2001년 종합자금 융자제 본격

〈표 1〉 2000년 농림부 소관 예산(안)

(단위 : 억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기             별	I. 투융자 사업	36,958	38,485	1,527	4.1
	· 생산기반조성	17,806	17,224	-582	-3.3
	- 재해대비 기반구축	8,187	8,632	445	5.4
	· 농업기계화	2,553	2,390	-163	-6.4
	· 생산 및 유통개선	11,297	13,188	1,891	16.7
	- 농산물유통개혁	5,477	8,942	3,465	63.3
	· 기술개발 및 정보화	467	432	-35	-7.5
	· 인력육성	2,748	3,177	429	15.6
	· 농가자금 지원 등	803	1,066	263	32.8
	· 생활환경개선	1,030	887	-143	-13.9
	· 기타사업	134	121	-13	-9.7
	II. 경직성 사업	31,467	31,603	136	0.4
	· 부담경감 및 채무상환 등	21,655	24,388	2,733	12.6
· 양곡지원	9,812	7,215	-2,597	-26.5	
사업 비 계	68,425	70,088	1,663	2.4	
III. 기본적 경비	1,158	1,170	12	1.0	
합 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지원 포함시)		69,583 (70,343)	71,258 (75,518)	1,675 (5,175)	2.4 (7.4)
재 원 별	· 일반회계	19,546	17,773	-1,773	-9.1
	· 농특회계	46,397	51,495	5,098	11.0
	· 재특회계	3,640	1,990	-1,650	-45.3
양곡관리특별회계		13,226	12,167	-1,059	-8.0
농특세관리특별회계		495	517	22	4.4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였다.

원예특작생산 유통사업과 기타 전업농, 축산분야의 일부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인의 자율책임 경영을 위해 경영체별 종합자금 융자제를 위한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 농업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며 경영컨설팅 예산도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같이 종합자금제는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농업인의 기술·경영능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상담, 기술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농업금융기관이나 지도기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종합자금은 정부재정 1,620억원, 농·축협자금 320억원을 합한 1,940억원을 지원 하되 농·축협자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예산 22억원을 별도 반영하였다.

논(쌀) 농업직불제를 2001년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그간 논의되어온 논 농업직불제는 2001년에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국무조정실·농림부·기획예산처 관련 공무원과 한국개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기획단을 설치,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과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0년 6월 말까지 직불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출확대와 안전성 강화 등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내수가 부진한 우리 농산물의 활로개척을 위해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과실·화훼·채소·축산물 등에 대한 농축산물 판매촉진 예산 149억원(46.4% 증가)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예산도 2.6% 늘어난 84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산물 품질인증·안전성

2000년도 농림부예산(안)은 7조1,258억원으로 올해보다 2.4%가 늘어났다. 이 중 사업비는 총 7조 88억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2.4% 증가된 모습이며, 기본적 경비는 1,17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업비 중 투융자 사업비는 3조8,485억원으로 올해보다 4.1%가 늘어난 규모이다.

검사·원산지 관리 등을 위해 1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동·식물 검역 및 방역예산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기타 이색사업으로 여성고용 확대와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가사나 농업노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이를 대신하게 하는 '농가 도우미 제도'가

새 천년 첫 해에 도입된다.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농업·농촌 투융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 하겠다.

그동안 농업·농촌 투융자 과정에서 일부 발생했던 비효율과 부실을 사전 차단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신지식·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발전시켜 우리 농업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앞서가는 희망적인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표 2〉 농업인 연대보증 현황(99년 4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대출잔액	연 대 보 증			기타 (신용·담보)	
		소 계	순수입보	농신보입보		
농업용	상호금융	66,680	27,695	22,040	5,655	38,985
	정책자금	112,847	40,673	27,249	13,424	72,174
	소 계	179,527 (100%)	68,368 (38.0)	49,289	19,079	111,159 (62.0)
비농업용	100,009	53,806	50,583	3,223	46,203	
총 계	279,536 (100%)	122,174 (43.7)	99,872	22,302	157,362 (58.3)	

〈표 3〉 농업·농촌 분야별·재원별 투융자사업비

(단위 : 억원)

	총투융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 타
·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발전	149,663	130,593	15,290	3,780
· 건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77,811	71,927	1,986	3,898
·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지원	18,063	15,842	1,579	642
·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	87,142	67,959	5,118	14,065
·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의 증진	81,304	55,520	23,196	2,588
·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36,543	36,543	-	-
합 계	450,526	378,384	47,169	24,973

#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확충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는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장래 경제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물동량 증대와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으로 대부분의 교통시설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손실은 국내총생산(96년) 대비 16.3%인 약 64조원으로 선진국에 비해 1.5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재도약과 적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SOC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0년 예산(안)에서는 SOC 투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완공 위주의 예산 편성과 순차적 예산 반영을 통해 부실과 낭비를 방지하며, 투자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류영창**  
건설교통부 예산담당관

또한 맑고 풍부한 물 공급과 하천치수, 위험도로·교량의 개량 등 생활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 그리고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와 시장기능을 통한 주택공급의 혜택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투자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0년 예산(안)에서도 정부의 재정증가를 5%보다는 다소 낮지만 4.7% 증가한 14조423억원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을 편성하였다.

부문별로는 도로·철도·지하철·수자원 등에서 3~18%가 증액되었고, 공항·항만·산업단지 지원 부문은 투자계획 조정을 통하여 전년보다 5~28% 감소하였으며,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 도로부문 예산에 7조3,850억원

90년 이후 도로투자가 연평균

〈표 1〉 사회간접자본 투자증가율 추이

(단위 : 조원,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SOC투자액	6.7	8.3	10.3	11.6	13.4	14.0
SOC투자 증가율	23.1	23.9	24.1	12.6	15.5	4.7
재정규모 증가율	15.1	14.8	13.4	13.1	6.2	5.0

21.8% 증가되었음에도 도로교통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97년말 현재 교통애로 구간은 전체 간선도로의 30.1%인 4,323km에 이르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국가간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2002년까지 고

속도로를 1.5배로 확충(1,996km → 2,800km)하고, 3,784km에 달하는 국도의 교통애로구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00년도에는 지역간 교통애로구간 해소를 위한 일반국도 건설에 1조7,610억원, 공단·항만과 연결되는 기간국도 및 산업지원국도 건설에 1조8,50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지원에 3,150억원, 市관내 국도우회도로 건설지원에 3,800억원 등 총 4조4,270억원을 국도 확·포장 사업에 투자하고, 국도유지 보수와 병목지점 개선 등 기존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부문에 6,5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건설투자는 추진중인 주요 고속도로 사업을 완공 위주로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중 4조5,816억원을 투입하여 서해안·중앙 고속도로 등 33개 사업의 확장 및 신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사업비의 약

경제의 재도약과 적정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SOC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0년 예산(안)에서도 정부의 재정증가율 5%보다는 다소 낮지만 4.7% 증가한 14조423억원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을 편성하였다.

50%인 2조2,77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출자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 지하철 건설 및 운영 지원 등에 1조1,719억원 반영

현재 305.4km의 대도시 지하철을 2004년까지 506.9km로 확대하여 지하철중심의 대도시 교통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하에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의 6개 노선의 지하철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조1,7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지하철 건설비는 완공위주로 2000년도 필수소요분을 반영하여 전체사업비의 50%(서울은 40%)인 8,307억원을 집중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신규개통되는 인천지하철 운영비와 대구·부산지하철 운영비 3,332억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도시철도 차량표준화사업과 경량전철 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4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원활한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는 경부고속철도는 시험선 구간은 대부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노선공사·레도부설·전기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2000년 누계공정목표 62.5%)할 수 있

〈표 2〉 SOC 부문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억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도로	69,511	73,850	4,339	6.2
철도	18,080	21,387	3,306	18.3
지하철	10,334	11,719	1,385	13.4
항만	10,170	9,612	-558	-5.5
공항	10,283	7,409	-2,874	-27.9
대중교통 지원	230	522	292	126.8
수자원	10,599	10,872	272	2.6
산업단지 지원	3,533	3,154	-379	-10.7
기타	1,347	1,898	551	40.9
합 계	134,088	140,423	6,335	4.7

도록 2000년 연간사업비 2조 926억원 중 국고지원금 7,700억원과 관리비 309억원, 기술개발사업비 110억원 등 총 8,119억원을 편성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초 개항을 목표로 추진중인 활주로·여객터미널·고속도로·철도기반시설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연간사업비 1조3,174억원 중 국고지원액 2,878억원과 공단관리비 277억원, 종합시운전비 716억원 등 총 3,8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한편, 2000년 항공수요가 8,600만명에서 2010년에는 1억3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94년에 수립된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항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양양·대구공항 등 10개 공항의 신설·확장사업과 항공보안시설 및 항로관제시설 개량 등을 위하여 3,53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김해공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등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양·대구·여수 공항은 건설 및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안·포항·울진·예천 공항은 용지매입 및 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권 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전주공항 실시설계비 2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내공항의 안전성과 안전운항을 제고하기 위한 항공보안시설 및 항로관제시설 확충사업도 3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환경 및 시설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광역도로, 광역전철망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권내 도시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에 1천억원, 청량리~덕소 등 3개 노선의 광역철도에 1천억원 등 2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종래 지하철 위주로만 시행되던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시설로도 확대하여 도시교통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도권내 환승주차장 22억원, 공영차고지 150억원 등 172억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다. 또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지원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객터미널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해 250억원 등 대중교통(버스)인프라의 예산을 크게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 치수사업에 6,950억원 다목적댐 등에 3,921억원計소

2001년까지 국가하천과 지방 1급하천은 100% 개수를 완료하고, 지방2급하천은 현재 60%인 개수율을 74%로 높여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수계단위별 하천개수사업을 확대 추진중에 있다. 2000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데 이어 내년도도 높은 수준의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6,9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일반하천 개수사업을 지속적으

〈표 3〉 도로부문 예산(안) 내역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국도 확·포장	41,445	44,270	2,825	6.8
· 일반국도	18,109	17,610	-499	-2.8
· 기간국도· 산업지원국도	16,306	18,500	2,194	13.5
· 국가지원지방도	2,760	3,150	390	14.1
· 시 관내 국도우회	3,300	3,800	500	15.2
· 광역도로	900	1,000	100	11.1
· 교통량조사 등	70	210	140	200.0
고속도로건설 지원	22,068	23,045	977	4.4
도로운영	5,998	6,535	537	8.9
합 계	69,511	73,850	4,339	6.2

(단위 : 억원, %)

로 추진할 수 있도록 1,0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수계치수사업 중 한강·낙동강 등 기존 8대 강은 2003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며(임진강 2001년 완공), 최근 홍수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중·소하천 수계치수에 신

규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계치수사업에 총 4,1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국가하천에 비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심각하였던 지방2급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99년 현재 93억t인 용수공급능력을 2002년까지 107억t으로 확대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6개 댐 건설사업과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다목적댐 조사사업 등을 위하여 3,92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건설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영천댐 도수로사업은 2000년도 완공소요액 638억원을 편성하였고, 밀양댐·용담댐은 2001년 완공을 위한 적정소요를 반영하였으며, 탐진댐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2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영월댐은 수몰예정지 투기단속과 각종 시설물 관리비만 반영하였다. 다목

부문별로는 도로·철도·지하철·수자원 등에서 3~18%가 증액되었고 공항·항만·산업단지 지원 부분은 투자계획 조정을 통하여 전년보다 5~28% 감소하였으며,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적댐 건설에 따른 보상비는 총소요액 2,988억원 중 2,4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출자하도록 하여 용담댐·탐진댐 등의 수몰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업의 생산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0년도 예산(안)에서는 녹산·북평·구미·어곡 등 23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지원에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업용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장I단계 등 5개 국가산업단지와 12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에 824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아울러 서남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서남권 신산업철도(2006년 완공) 중 1단계로 일로~대불공단간 12.4km 철도에 대한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 철도건설 예산은 1조3,267억원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철도건설예산의 경우 1조3,26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전라선 개량, 호남선복선화, 수원-천안2복선 등 간선철도 건설사

업과 경인2복선, 분당선, 전동차기지 건설 등 광역전철망사업, 철도 노후시설개량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정부의 SOC 예산추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예산사업으로 주택건설지원 예산이 총 6,059억원이 편성되어 근로자주택건설자금 지원 및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등에 4,568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며,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비 1,360억원이 편성되었다.

수도권 I단계 복선화, 충주댐계통, 제주도 광역상수도 등 16개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5,26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호남권 내륙화물기지와 대전·음성의 유통단지 개발 등 물류개선 사업에 334억원, 전주권II단계, 백제권개발, 개발촉진지구 지원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개발사업 예산 1,564억원이 편성되었다. ■

# 맑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

경

제발전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는 90년 이후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그러나 98년 이후 IMF 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등에 정부재정이 우선적으로 배정됨에 따라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훼손된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해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 99년 1월 중기 재정 계획(1999~2002년)을 수립하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투자를 정부 평균 재정규모증가율 이상으로 집중투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민의 정



김상일  
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

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맑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내년도 환경예산(안)을 99년도 예산(1조1,536억원)보다 12.7%(1,461억원) 증가된 1조2,997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 환경예산, 99년보다 12.7% 증가

2000년도 일반회계와 재정용자특별회계를 합한 정부 전체의 평균 예산규모증가율은 5.0% 수준으로 건전재정을 조기에 회복하

기 위하여 재정규모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 천년을 맞아 미래에 대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환경의 세기가 될 21세기를 여는 내년도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내년도 환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정개혁과제' 대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소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중점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마시는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관리종합대책」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셋째,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대도시의 공기 질 개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넷째, 자연환경관리 및 환경교육·홍보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

려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상수도 관리 등 물 분야의 환경부 예산은 올해의 5,968억 원에서 6,524억 원으로 9.3% 증가하였으며 환경부 전체예산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개발사업 지원(873억 원 → 886억 원)을 늘리는 한편, 갈수기 수원부족 및 수질오염으로 수원변경이 필요한 부산·경남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신규지원(20억 원)하는 등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

정부는 99년 1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투자를 정부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으로 집중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맑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부응, 내년도 환경예산(안)을 99년보다 12.7% 증가된 1조2,997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내년도 2,585km의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하는 한편, 국민들의 수돗물 절약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신규로 1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98년 11월 수립된 '팔당 특별대책'을 정부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양여금 부족분을 신규로 300억원(2005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6년간 총

1,800억원 국고지원을)을 계상함으로써 수도권 상수원 수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예산에 반영하였다.

한편, 수질오염저감 및 공단분양가 인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단 하·폐수처

리장 설치비를 지속 지원(549억 원 → 565억 원)하고, 금년에 팔당호 유역에 추진중인 녹조방지 사업을 낙동강·대청호·주암호에까지 확대(40억 원 → 75억 원) 실시해 나가는 한편, 합병정화조 설치(50억 원) 및 연안하수처리장 설치(1,125억 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예산 확충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기반 예산을 올해의 2,686억 원에서 2,865억 원으로 증액(6.6%) 편성하였다.

쓰레기 매립 및 대규모 소각시설 설치가 곤란한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위생적 소각처리 및 소각률 제고(98년 9% → 2001년 20%)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시급 이상에만 지원해 오던 소각시설 설치를 군단위 소각시설에까

〈표 1〉 2000년 환경예산(안) 부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19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	감률
상수도관리	241,557	244,180	2,623	1.1
수질보전 및 하수도관리	355,222	408,195	52,973	14.9
폐기물관리	268,654	286,513	17,859	6.6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	114,015	126,727	12,712	11.1
자연환경보전	59,195	72,938	13,743	23.2
대기보전	9,490	46,201	36,711	386.8
환경관리 기타	105,473	114,954	9,481	9.0
계	1,153,606	1,299,708	146,102	12.7

지 신규로 확대 지원하는 등 소각 시설 설치 예산(657억원 → 660억원)을 편성하였다.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매립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391억원)하는 한편, 상수원 상류 등의 수질·토양 오염 방지 및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립이 종료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예산을 대폭 확대(41억원 → 316억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의 노후화·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신규로 보조지원(30억원)하고, 영세 재활용업체에 대한 재활용시설 설치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500억원) 및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111억원) 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반 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장기 방치되고 있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대집행 처리예산을 확대(6억원 → 16억원) 편성하였다.

### 대도시 등 대기환경개선 예산 획기적 확대

정부는 수질개선이나 폐

기물처리 등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아울러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기보전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을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확대(95억원 → 462억원, 99년 대비 386.8% 증액) 편성함으로써 대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등 앞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유버스를 무공해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2007년까지 총 2만대 교체, 우선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5천대 보급계획)하기 위하여 내년예산으로 334억원(버스 1,500대 교체비용 124억원 국고보조, 충전소 30개소 설치비 210억원 국고용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경유차에 비하여 매연은 100%, 오존생성물질은 60~70%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동차 오염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 예산을 증액(10억원 → 15억원)하여 경유차 저공해기술개발 이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공해 기술개발비도 신규편성하였다.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굴뚝 자동측정·상시감시체제를 기존의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인 여천·울산·온산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규제지역인 수도권지역으로까지 확대 구축(21억원 → 41억원)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연보전 및 연구개발 예산 지원 확대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이나 국립공원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을 위하여 자연보전 분야 예산을 확충(592억원 → 729억원, 23.2%)하여 편성하였다. 자연탐방로 정비, 공원자원 보호 등 국립공원 관리사업(395억원 →

〈표 2〉 물관리 분야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19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	감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87,272	90,596	3,324	3.8
정수공정의 현대화 및 수돗물 절약	148,051	147,641	-410	-0.3
하수처리시설 확충	269,741	322,887	53,146	19.7
공단 하·폐수처리장 설치	69,621	68,658	-963	-1.4
녹조방지대책 추진 등	22,094	22,593	499	2.3
계	596,779	652,375	55,596	9.3

430억원),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연학습장·생태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예산(25억원 → 73억원)도 확충하여 편성하였다.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하여 장비 구입·홍보·운영경

비 등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6억원)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자연환경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우포늪지 토지매입 등 습지보전대책, 무인도서 관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자연환경보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 '환경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의 선진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환

환경예산(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정개혁과제' 대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 추진, 「물관리종합대책」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대도시 공기 질 개선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경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확충(427억원 → 545억원)하여 각종 환경개선 분야 기술수준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G-7 환경공학기술개발 사업 등 환경기술연구개발비(165억원 → 200억원)를 증액편성하였다.

한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산업현장 등 각 주체가 합동으로 지역환경문제를 연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4억원 → 15억원)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간의 대기오염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비(8억원)를 신규

로 편성하였으며, 먹는 물 관리(5억원 → 6억원), 종합환경연구단지 조성(210억원 → 243억원) 등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의 예산에 중점을 두었다.

환경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환경보전 홍보·교육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청소년 현장체험 환경학습 예산(12억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물질약 시책추진 홍보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 등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책들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정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및 홍보분야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애를 썼다. ■

〈표 3〉 폐기물관리 분야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19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 감	증감률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65,735	65,978	243	0.4
비위생매립지 정비	4,102	31,550	27,448	669.1
폐기물재활용 촉진	124,404	127,206	2,802	2.3
사업장폐기물 처리지원	21,848	10,630	-11,218	-51.4
쓰레기매립지 설치 등	52,565	51,149	-1,416	-2.7
계	268,654	286,513	17,859	6.6

# 해양부국의 기틀 마련

**지**난 1년 우리는 참으로 급변하는 국제해양환경을 체험하였다. 술한 무역곡절 끝에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바 있고 한·중 어업협정도 가시명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유엔해양법의 발효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가 도입되어 연안국의 관할수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본·중국 등 인근국가와 어업수역의 조정이 불가피하였던 데 기인한 것이다.

이는 치열한 해양경쟁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의미한다. 다가오는 새 천년은 지식기반사회, 디지털시대, 국경 없는 경제, 해양 중심의 장기·저강도 분쟁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 “누가 한국을 구원할 것이냐, 한국을 바다의 나라로 일으키는 자가 그일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해양을 향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와 함께 해양개발·이용에 대한 투자확대 여부가 새 천년 국가발전의 잣대가 될 것으로



**박남춘**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

예상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예산(안), 99년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

새 천년 첫째 해양수산부 예산(안)은 99년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된 2조606억원(순계) 규모로 정부재정 증가율 5.0%에는 미치지 못하나, 부산신항 어업권 보상 등 99년 완료사업(30개 사업 5,694억원)을 감안하면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이다.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해양기지 구축, 신항만 건설, ‘기르는 어업’ 육

성, 수산물유통구조 개혁 등 해양부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한 물류애로 해소, 신어업 질서에 맞는 어업인 보호·육성, 해양자원의 개발 및 바다환경 보전 등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첫째, 해양개발에 대비한 기술력 축적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실용해양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해양지식 기반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부산신항, 광양항 및 평택항(아산항) 등 3대 국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항만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신어업 질서에 적합한 어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수산물유통구조 개혁, ‘기르는 어업’ 집중육성 및 다기능 어촌기

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진형 수산물 생산·유통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넷째, 연안해역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상에서의 안전확보 소요가 지속적으로 투자되도록

바다환경의 보전과 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 해양과학기술 개발하고 해양환경보전 지원 확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식과 과학기술 개발만이 신해양 시대에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부가가치의 해양지식산업을 창출하기 위하여 R&D사업에 285억원을 반영하여 심해저 광물의 채광·제련 기술 등 상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생물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 및 실용화 연구, 무공해

새 천년 첫해 해양수산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해양기지 구축, 신항만 건설, '기르는 어업' 육성, 수산물유통구조 개혁 등 해양부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99년 당초예산 대비 3.2%가 증가된 2조 60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해양에너지 활용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며, 해양생물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 및 실용화 연구, 무공해 해양에너지 활용기술 개발, 남·북극 및 남서태평양 해양자원 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진주 양식, 갯벌 머드팩, 어병치료제 등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해양수산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연안해양은 산업화에 따라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종합적인 관리체제가 미흡하여 후손에게 자신있게 물려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내년부터는 282억원을 투입하여 해양오염측정망 확대, 특별관리해역 오염원 관리 및 수질정화사업이 실시되며 육상에서 유입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갯벌의 매립·간척, 도시확장 등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보전·이용·개발을 실현함으로써 연안의 가치와 이용자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5억원을 투입하여, 제방·호안 등 해안보전 사업, 폐선 제거, 철새 서식지 정비 등 연안해역 개선사업, 해양공원의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연안정비사업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지원

부산, 일본 고베, 중국 상해항 등은 동북아 물류거점항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확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산·광양항을 핵심 중추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정보통신·무역·금융 기능 등 종합물류센터 기능을 갖춘 부산신항, 울산신항,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등 신항만을 건설하여 새 천년 항만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항만의 대형화에 맞추어 항만운영의 선진화

〈표 1〉 2000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단위 : 억원, %)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추경예산			
해운·항만 부문	10,078	10,778	10,248	170	1.7
수산 부문	7,596	9,679	7,828	232	3.1
해양 부문	2,296	2,359	2,530	234	10.1
계	19,970	22,816	20,606	636	3.2

註 : 99년 추경예산 추가내역 : 어업인 지원 2,092억원, 실업대책 700억원, 중산·서민층 지원 54억원

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항만 건설사업은 용지, 어업권 보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3,661억원이 지원되고, 방파제·호안·도로 등 항만기초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수출입 화물처리, 국토종합개발에 따른 군산·여수·포항·속초·제주 등 권역별 주요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3,70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 컨테이너 배후도로, 광양항 컨테이너 배후수송시

설, 컨테이너 공단지원 등 컨테이너부두 개발지원에 980억원을 계상하여 물류어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항만운영시설의 확충·개량 및 현대화로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12억원을 반영하여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이 2001년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항만근로자 휴게소 등 항만운영건물 신축, 항만요율체계 개선연구 등 선진형 항만운

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항만 운영 정보시스템(PORT-MIS)이 가동되어 종합물류정보망이 구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이 한층 더 증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

한·일 어업협정 체결,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 등 새로운 국제어업질서 아래에서 우리 수산업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어업구조로 전환하고 '기르는 어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로 2004년까지 6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동 계획에 의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육상양식단지, 양식·자원 조성, 판매시설을 겸한 복합양식단지, 한·일 수역의 수산자원 공동 조성·관리를 위한 한·일 수산자원조성센터 건립 등 '기르는 어업' 분야에 52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선 감척사업에 803억원이

〈표 2〉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환경보전 부문 예산(안)

(단위 : 억원)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내역
해양조사·정보화	78	111	33	
연안해역환경보전	117	282	165	
연안정비·관리	21	115	94	· 해안보전·개선사업 · 해양EXPO 유치 지원, 장보고 대사 재조명·평가
해양관광·문화	20	46	26	
계	320	695	375	

〈표 3〉 항만시설 확충 및 운영 부문 예산(안)

(단위 : 억원)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증 감	내역
기존항만 건설	3,192	3,747	555	
항만운영시설	334	412	78	· 항만운영시설 현대화 · 컨테이너수송시설 및 컨테이너 공단지원
컨테이너부두 건설 등	1,513	1,077	-436	
계	9,411	8,897	-514	

지원되고(99년 추경예산으로 1,740억원이 편성된 바 있음) 어장의 보전과 수산물 증산을 위한 어장정화사업이 확대지원된다.

어촌환경 개선과 생산기반시설을 연계한 다기능 종합어촌 건설을 위한 어

항건설 및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875억원이 투자되고, 어업경영에 필요한 영어자금·어망생산자금 등은 1,609억원을 계상하

해양수산부는 해양지식 기반사업의 전략적 추진, 부산신항·광양항·평택항 등 3대 국책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기존 항만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선진형 수산물 생산·유통체제 구축, 바다환경의 보전과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여 어업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였으며, 수산에 관련된 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해역별 지원연구소 등 국립

수산진흥원의 시설보강과 특정연구개발비로 212억원이 계상되었다.

또한 어업인 육성자금, 어선건조 및 설비·기계 지원, 원양어업 지원,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어선감척사업 추진 등 국내·외 여건변

화를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축소하였다. 농어촌 사회의 불안요인인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상상환중인 어민연대보증대출자금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전환하여 6만여 어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하였다.

〈표 4〉 수산업 발전기반 조성 부문 예산(안)

(단위 : 억원)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내역
		예산(안)	증 감	
'기르는 어업' 육성	342	525	183	· 양식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어업구조조정	2,163	803	-1,360	· 연근해 어선감척
어장환경 개선	176	280	104	· 어장정화
어업경영 지원	2,112	1,609	-503	·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지원
다기능어촌 건설	1,760	1,875	115	· 어항건설, 어촌종합개발
수산기술연구	203	212	9	· 수산정책연구개발, 시설보강
자원조성 등	1,777	1,090	-687	· 인공어초, 어업인육성 등
계	8,533	6,394	-2,139	

〈표 5〉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및 가공산업 육성 예산(안)

(단위 : 억원)

	99년 예산	2000년 예산(안)		내역
		예산(안)	증 감	
직거래기반시설	716	719	3	· 종합판매장, 물류센터, 산지종합처리시설
유통기반 시설	30	296	266	· 도매시장, 유통정보화
가공산업 육성	369	385	16	· 냉동·냉장시설, 산지가공시설
수출 지원	7	11	4	· 해외시장개척
계	1,122	1,411	289	

### 수산물유통구조 혁신

99년에 이어 수산물 유통예산은 2002년까지 유통예산 비중을 어촌투자 예산의 30%까지 높이기 위해 1,41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지도매시장건립 및 생산·가공·판매가 연계된 종합처리시설 지원으로 수산물의 직공급체제가 확대되는 등 산지유통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원되며,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및 물류 표준화 등 유통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감천수산물유통단지 건설을 조기에 앞당기고 냉동·냉장시설 등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확보,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수산물 가공산업부문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여객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노후여객선 건조와 낙후 보조항로 운영경비지원에 10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6개 항만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고 무인등대·등표 증설 및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선박폐유저장시설 등 재해방지시설 확보 등을 위해 29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노후된 항만시설 유지보수비로 1천억원, 부산·인천 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연수원 등 선원교육시설 확충에 117억원을 투자하여 항만시설 안전 및 선원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새 천년의 해양시대를 준비

지식·정보화와 해양화가 중시되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다가오고 있다. 21세기는 해양강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청색혁명(Blue Revolution)

을 통하여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인류를 배고픔의 위기에서 탈출시켜 준 것이 녹색혁명이라면, 에너지 광물 식량 및 공간자원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해양수산부가 일으키고자 하는 청색혁명이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혁명역군으로 거듭나서 시대를 선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2의 장보고시대'이다.

해양수산부는 새 천년을 '제2의 장보고시대'로 장식하기 위하여 명실공히 해양수산 분야의 '뉴 밀레니엄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Ocean Korea 21」을 금년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2030년 일류 해양국가로 새롭게 변모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Ocean Korea 21」은 해양국토의 글로벌 경영, 건강하고 풍요로운 바다정원 조성,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의 진흥,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의 창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 해양에너지·광물·공간자원의 산업화, 전방위 해양수산외교의 추진 등을 '제2의 장보고시대' 구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Ocean Korea 21」이 담고 있는 해양수산비전의 성취를 위해서는 해양강국을 향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작고 강하면서

유능한(slim, strong, and smart) 행정체제로의 재편과 해양수산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담아내는 법과 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투자재원의 확보라는 요소가 얹혀져야 가능할 것이다.

「Ocean Korea 21」의 추진에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어 한정된 국가재정으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는 수산발전기금 조성, 민자유치, 차관도입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노력, 사업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는 경쟁원리 도입, 어업경영종합자금제 시행, 매칭펀드(Matching-Fund) 사업개발 융자사업 확대 등 재정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 바람직한 재정적자 관리 방향

**재** 정은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구조조정 지원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부채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이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최근까지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던 마지막 보루인 재정마저 악화되어 있다면 외국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은 브라질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경제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금, 정부는 재정정상화를 위해 필자와 함께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잠정적인 전망결과에 따르면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올해초 생각했던 것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200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말 20% 가까운 수준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적자 확대되고 부채 늘어

국가채무는 1996년말 36조8천억원(GDP의 8.8%)에서 작년말 71조4천억원(15.9%)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말에는 94조2천억원(19.4%)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국가채무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국채의 증가이다. 올해말의 차입금 잔고는 1996년말에 비해 14조원 늘어났다(표1 참조). 반면 국채는 43조5천억원이 늘어났으며 그 가운데 국고채권은 34조원이 늘어났다. 특히 차입금의 증가가 경제위기 발발

직후인 1997년말에 집중되었던 데 반해 국채는 순발행액이 작년 18조1천억원, 올해 22조5천억원으로서 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의 국채 순발행액은 올해보다도 많을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먼저 재정운영의 측면에서는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여타 투자사업에 투입될 자금이 고갈된다. 또 이자부담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국채잔고가 상승하여 다시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며,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에서 2010경 15% 정도로 낮아져서, 2014년에는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인 1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여러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세입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5%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세수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또 세출 측면에서는 재정규모 증가율이 내년 5%, 그 후 매년 6% 정도에서 억제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 발행하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은 순증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2005년부터는 순증 없이 차환발행만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잠정적인 전망결과에 따르면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올해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200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말 20% 가까운 수준에서 2010년경  
15% 정도로 낮아져서, 2014년에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1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2004년이 될 전망**

이러한 가정이 틀릴 가능성은 많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계속 지연된다면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고 세입증가율은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다. 경제여건이 재정적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는 미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세출증가율이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6%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훨씬 늦추어질 것이다.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세출증가 억제에 실패할 가능성이다.

첫째, 국채이자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의

이자를 합한 금융비용은 향후 연간 8~10조원에 달하고 재정규모에서 점하는 비율은 10% 가까이 된다. 이로 인해 여타 세출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권이 나 일반 국민이 이를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에도 당초 재정규모 증가율이 5.2%였으나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6%로 늘어난 바 있다.

둘째, 사회복지지출의 급증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규정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법적 의무가 되었다. 더구나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빈곤하기만 하면 무조건 급여를 제공해야 하므로 재정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

〈표 1〉 국가채무 현황

(단위 : 조원, %)

	95년말	96년말	97년말	98년말	99년말*
국가채무 (대 GDP)	35.6 (9.4)	36.8 (8.8)	50.5 (11.1)	71.4 (15.9)	94.2 (19.4)
· 차입금	8.2	8.0	18.5	21.8	22.0
· 국 채	23.3	25.7	28.6	46.6	69.2
- 국고채권	3.0	4.9	6.3	18.8	38.9
- 일반회계	-	-	-	9.7	22.6
- 재정융자특별회계	-	-	-	-	1.0
- 특별회계·기금	3.0	4.9	6.3	9.1	15.3
- 국민주택채권 등	20.3	20.8	22.2	27.9	30.3
· 국고채무부담행위	4.1	3.1	3.4	3.0	3.0

註 : \* 전망치임.

자료 : 기획예산처

이 높다. 이에 더하여 공무원연금의 수지악화로 인해 정부부담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복지지출 및 이자부담이 연방정부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셋째,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의 약화가 우려된다. 일단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이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 이후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나서야 위기의식을 갖고 최근 본격적인 재정긴축에 착수하였다. 국민 모두 재정긴축의 총론에는 찬성하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서로 다른 이해에 집착하여 재정긴축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요인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200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뿐더러 선진국처럼 수십년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총량적 예산통제제도 도입 필요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예산에 대한 총량적인 통제이다. 미국·캐나다·스웨덴 등 1990년대에 들어와 재정긴축에 성공한 나라에서는 모두 총량적인 통제를 택하였다. 향후 3~5년간의 재정규모를 사전적으로 공표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지켜나갔던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1980년대에 GRH(Gramm-Rudman-Hollings)법을 통해 재정적자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추어 세출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재정적자는 경기상황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에는 예산통제법(Budget Enforcement Act)을 제정하여 적자규

모가 아닌 세출규모를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예산통제법에서는 전체 예산을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로 나누었다.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분야별로 지출한도(cap)를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해당 분야의 지출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 반면 사회복지 등의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경기상황에 따라 지출액이 자동적으로 변함을 고려하여 지출한도를 정하지 않고 PAYGO(pay-as-you-go) 원칙을 적용하였다. 즉, 의무지출의 재정적자를 증가(지출확대 또는 수입감소)시키는 법안이 제정되면 이에 대응하여 재정적자를 축소(지출삭감 또는 수입확대)시키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예산통제법은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의 지출이 당초 설정한 재량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는 주로 자연재

〈표 2〉 중기 재정전망 (잠정)

(단위 : 조원, %)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10년
실질성장률	7.5	6.4	6.0	5.9	5.6	5.3	3.5
경상성장률	6.0	9.8	9.2	8.5	8.0	7.6	4.6
세출증가율	9.6	5.0	6.0	6.0	6.0	6.0	6.4
통합재정적자/GDP	-4.0	-3.5	-2.6	-1.7	-0.8	0.0	1.5
국채발행액*	12.9	11.5	8.5	5.5	2.5	0.0	-10.1
국가채무 (대 GDP)	94.6 (19.8)	118.8 (22.7)	140.9 (24.7)	154.7 (24.9)	167.2 (25.0)	174.9 (24.3)	148.4 (14.7)

註 : \*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해나 이라크전쟁과 같은 돌발상황 때문이었으며 초과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다. 한편 1992년 이후의 장기호황 덕분에 세수가 증가하고 복지지출은 감소하여 작년엔 연방정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흑자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 향후 조기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총량적인 예산제약의 실시이다. 예산제약의 대상으로는 세출규모 자체가 가장 바람직하다. 재정적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예기치 못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 예산제약을 실행하지 못하면 예산제약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세출규모 자체를 통제하는 대신 세입과 적자폭은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출규모의 통제가 어렵다면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도 있다.

총량적인 예산제약은 일반회계나 재정융자특별회계뿐 아니라 여타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하는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의 <표 1>에도 나타나 있지만, 특별회계

조기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량적 예산통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예산제약의 대상으로는 세출규모 자체가 가장 바람직하다. 대신에 세입과 적자폭은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및 기금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국가채무를 낮추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규모증가에 대해서도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예산제약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스웨덴은 예산제약을 법제화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가채무/GDP 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10% 이하)으로 낮출 때까지 한시적인 특별법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동 법에서는 ① 연차별 예산제약을 규정하고 ② 세제감면 시 감면분에 대한 증세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며 ③ 세계(歲計)잉여금은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의 구체적 수단을 설정한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 기금이 완전 소진될 전망이다. 이후 당년도 적자규모는

2005년 1조8천억원, 2010년 6조원, 2020년 31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악화의 근본적 원인이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는 만큼, 제도개선은 부담수준을 높이고

급여를 삭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정된 사업예산의 지출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점차 확대하여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적 성과평가제도(program evaluation)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농업·중소기업 등 각 부문별로 예산사업의 효과를 검증하여 추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향후 재정규모 증가율을 묶어둠으로써 재정규율을 확립하는 것이다. 경기상황에 따라 실제 균형회복 시점은 2004년보다 늦추어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정규율이 확립되는 한 균형재정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점이다. ■

# 이 달 의 초 점

11월 금융위기설-현실화 가능성은?

## 11월 금융위기 우려된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주) 대표이사

**1** 월 금융위기설은, 11월 10일부터 투신사 펀드내 대우채권에 대해 80% 지급이 시작되면서 투신사가 보유채권을 시장에 매도하게 되며, 그 결과 금리상승·주가폭락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비롯된다. 또한 채권매각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과 대우채권 손실보전금이 부족한 투신사들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11월 금융위기 방지에 미흡

정부는 이에 따라 투신사가 보유한 대우채권에 대해 기간별로 80% 또는 95%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1월 금융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설치, 투자신탁 신상품 허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들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의 대우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과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투신사 펀드내에 들어 있는

18조7천억원에 달하는 무보증채권 및 CP에 대해 80% 내지 95%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2조8천억 내지 4조2천억원이 소요된다(채권회수율 50%,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중 50% 가정시). 이 손실 보전액은 펀드판매증권사와 투신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신사당 많게는 4~5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자본금 이상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투신사가 약 8개(80% 지급시) 내지 13개사(95% 지급시)에 이른다. 이러한 투신사들은 증자가 여의치 않을 때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내년 7월 이후에 대우채권을 시가평가하여 환매하게 되어 있는 기관투자자의 부실화 문제이다. 기관투자자를 통해 투신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일정수준 지급이 보증되는 투신사 고객과 불평등하게 취급되며, 또한 투신의 부실문제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 위험을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투신사의 채권펀드는 시장수익률 상승시 상당한 평가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환매금지 조치가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투신사 공사채형 펀드에

는 대우 무보증 채권과 CP가 약 12%, 그 외 일반 채권이나 CP가 88% 정도 편입되어 있다. 문제는 일반채권의 수익률이 8~9%에 지나지 않아,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약 1~2%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1월에 채권형 펀드에 대한 환매가 발생하면 대우채권 외의 일반채권을 매각하여 환매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매각 손실이 발생하여 펀드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채권형 펀드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지, 펀드내 우량채권을 채권안정기금이나 한국은행이 매입해 준다든지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손실이다. 물론 그때까지 정부 의도와 같이 8%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투신사 환매로 인한 여파로 시장금리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때 상당수 투자자들이 평가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서둘러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20조원의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환매자금의 규모에 따라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환매금지 당시 대우채권은 총 150조원에 달하는 펀드에 편입되어 있어 20조원으로 이들 펀드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투신사 보유채권 중 투기등급인 BB 이하의 채권이 33%에 달하고 있어, 우량채 위주로 매입하는 채권시장 안정기금에 매각할 채권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손실이 분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만약 11월에 발생하는 환매가 펀드 유동성자금을 초과하게 되면 채권을 매각해야 하므로 이때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매수역력과, 펀드내 채권매각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남아있는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분담되는가 하는 점도 문제될 것이다. 현행 투신제도는 빠져 나가는 투자자로 인한 평가손실액을 남아있는 장기투자자가 물도 록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정부의 대우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과정이 불확실하고, 투신사의 채권펀드는 상당한 평가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으며, 20조원의 채권시장안정기금도 펀드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투신사의 채권매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신상품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금유입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량채권만을 편입하는 신MMF, 종목당 투자제한이 완화되는 사모채권형 펀드,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정크본드 펀드 등 여러 가지 채권 관련 신상품을 허용하기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들 신상품은 신MMF를 제외하고 모두 채권 시가평가를 적용하므로, 채권금리가 장기적인 하향안정화를 보이지 않는 한 투자자들이 평가손실을 우려하여 투자를 꺼릴 것이다. 또한 포트폴리오 구성시 시장매입보다는 기존 펀드의 채권을 신규펀드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 경쟁력에서나 건전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대형투신사와 투신운용사들에 대해 명확한 대안 제시해야

정부 투신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거시적이며 당위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생리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정부정책에 호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적기에 환매하는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저금리 조기유도, 유동성 적극지원 등의 정부정책 의지를 확신하고, 심리적으로 안정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이 앞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몇 가지 한계로 인하여 언제 변경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정부가 그동안 투신 문제를 단편적이며 일관성이 부족하게 처리해 온 데서 기인한다.

투신사 펀드의 손실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89년 12·12조치 이후 누적되어 온 투신사의 펀드차입금(연계콜) 둘째,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분담금 셋째, 대우채권 이외의 부실채권 넷째, 펀드수익률과 시장금리 간의 차이로 인한 채권평가손실이다. 정부대책은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네 가지 손실 각각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상당히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 환매사태가 별문제 없이 넘어간다고 해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좀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차입금과 대우채권 손실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존 대형투신사나 투신운용사들에 대해 좀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7월까지 경영정상화 상황을 보아가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선 그때까지 서서히 자금을 찾아가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전후하여 상당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펀드차입금, 대우채권 손실분담금, 부실채권 등을 명확하며 효율적인 계획하에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하루속히 투신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투신사의 신규설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방형 투자신탁과 같은 수요확대 방안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장혼란을 우려하여 향후 금융상황이 안정되면 허용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자세라고 볼 수 있다. 투신

**정부의 투신대책은, 투자자의 생리를 잘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거시적이며 당위론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투자자를 설득하고 투신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시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투신산업 외부로 유출되는 자금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오히려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환매제도와 같이 장기투자자가 불이익을 받는 제도로는 환매유보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는 사실상 채권 시가평가를 조기에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투신산업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우채권 과다편입이나 편·출입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조속히 집행하고, 펀드운용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들이 다시는 비합리적인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다시 투자신탁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다양한 대책을 많이 내놓는 것보다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정부는 투신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론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제도선진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지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금융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이 달 의 초 점

11월 금융위기설 - 현실화 가능성은?

# 11월 금융대란은 없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과장

**은** 해 7월 하순 이후 대우 구조조정 추진으로 투신사 수익증권의 환매가 지속되고 금리·주가 등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금융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투신사 수익증권의 환매시 개인 및 일반고객에 대한 대우채권의 지급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조정되는 11월 10일 이후에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의 대량환매에 나서고 이러한 움직임이 금융시장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금융대란설까지 유포되고 있다.

### '예견된' 위기는 없다

무릇 위기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견된 위기는 없다. 위기의 징후가 이미 시장에서 포착되었다면 합리적 경제주체들은 위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고 정부도 위기의 징후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에서 논란되고 있는 '11월 금융대란설'도 마찬가지로 그 현실적 설득력이 없다.

최근 들어 대우사태의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충

격에 반응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신속해졌고 정부의 대응도 적시에 민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에 퍼져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조만간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1월 금융대란설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

하고 현명한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충분할 것이다.

'11월 금융대란설'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일부 투신권이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요구가 증가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기되었다. 둘째, 수익증권 환매요구시 매각이 용이한 우량채권을 매각하여 환매에 대응함에 따라 공사채형 운용자산 중 비우량채권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수익률 하락 위험이 증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 밖에도 채권시가평가제가 조기실시될 경우 금리상승 등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대우채권 지급비율이 약속된 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투자자의 조기환매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수익증권의 일시 대량환매가 발생하면 환매요구

에 응하기 위해 투신사들은 보유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매물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채권가격이 일시에 하락(채권금리 급등)하게 되며 금리급등은 수익증권 환매를 부채질하고 주가폭락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혼란은 현재 회복기에 있는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불안과 실물경제의 침체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외환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크게 실추되어 총체적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11월 금융대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이다.

그러나 11월 금융위기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신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금융시장안정 및 대우구조조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의 제반 경제여건이 외환위기 발생 당시와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우리 경제의 충격흡수와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제고되었고, 가용 외환보유고가 9월말 현재 655억달러로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이 총체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대우구조조정 추진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자세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시장상황 판단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 크게 배양되었고 가계·기업·금융기관 등 각 경제주체의 경제운영 능력도 더욱 성숙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도 11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금융시장 안정대책 마련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부의 다각적인 금융시장 안정노력과 금융기관 등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로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고, 가용 외환보유고가 99년 9월말 현재 655억달러로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이 총체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신사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안요인별 대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중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첫째, 정부는 최근의 장기금리 상승이 투신사 신탁재산가치를 하락시켜 환매심리를 촉발시키는 등 투신권문제를 악화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데 정책대응의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20조원 수준으로 조기에 확충하고 필요시 그 규모를 확대하여 투신사 매각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도록 하여 투신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채권 수요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16일 현재 약 10조 4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7조 4천억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9월 들어 한때 11%에 육박하던 회사채금리가 9%대 초반 수준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둘째, 금리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은행 및 투신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도록 하였다.

셋째, 투신사는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일명 gray fund)를 설립하되 펀드규모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투신사 및 판매사가 적극 참여토록 하여 투자위험을 투신사와 판매사에서도 분담토록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펀드가 설립·운용되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채권발행과 유통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온 투신권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개인 및 일반법인 등에 대한 대우 무보증 채권의 기간별 50~95% 지급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발생될 손실은 고객에 대한 지급책임이 있는 증권사·투신사가 부담하도록 손실부담원칙을 명백히 하되 필요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러한 지급원칙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투신사 펀드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의 조기실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신탁재산의 평가손 발생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환매증가를 막기 위해 동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즉, 기존펀드에 대하여는 금리변동에 따른 고객의 손실부담 위험이 없도록 현행 채권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가설정은 99년 8월말 수익증권 잔액 범위 이내에서 2000년 6월말까지만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2000년 7월 이후 수익증권 환매에 따라 펀드가 소멸되면 실질적으로 모든 펀드에 대해 채권시가평가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셋째,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대우구조조정을 조기에 매듭짓게 되면 투신사에 대한 불안요인이 대부분 해소되어 투신사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지므로 상당기간 투신사의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구조조정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신뢰확보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원칙하에서 투신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넷째,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

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경제 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간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시행과 함께 대우계열사의 채권단에서도 대우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플랜을 늦어도 11월초까지 조기에 수립하기로 하는 등 대우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글을 맺기 전에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좋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뮤추얼펀드는 84년 1천억달러에서 94년 1조달러로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일부 학자들로부터 주식이나 채권가격의 갑작스러운 폭락으로 인해 대량환매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유가증권 투매가 일어나 유가증권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94년에 멕시코 폐쇄화 폭락, 정부의 긴축통화정책,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파산 등 일련의 악재가 터졌으나 우려했던 대량환매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87년 10월의 주가폭락(Black Monday) 당시에도 주식형 펀드로부터의 대량환매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투자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전형적인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성향을 지니고 있고 단기적인 시장변동에 편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자들은 충격에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지해 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형태는 투자자들이 분위기와 소문에 편승하는 근시안적 투자행태에서 벗어나 투자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장기적인 투자안목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다. ■

## 왜 지금 ‘꼼꼼이 운동’ 인가 ?



김상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

옛날 어느 마을에 짚신을 삼아 생계를 이어가는 부자가 있었다. 열심히 짚신을 삼아서 장날 내다 팔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곤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똑같이 노력해서 만든 짚신인데도 아버지는 늘 순식간에 짚신을 팔아치우고 선술집 같은 곳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아들은 늘 해가 질 때까지 짚신을 다 팔지 못하여 찢찢때는 것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께 그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졸랐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좀처럼 대답해주지 않았다. 오기가 생긴 아들은 아버지를 이겨보려고 더욱 열심히 짚신을 만들어 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늘 아버지의 KO승이었다. 세월이 흘러 아

버지가 늙어 돌아가시게 되었다. 아버지 머리맡에 앉은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짚신을 잘 팔 수 있는지 비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드디어 아버지께서 그 대단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 ‘야, 이놈아. 털을 잘 뜯어야 되느니라.’ 아들은 ‘예?’

이 찢막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은 무엇일까?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99%를 잘해도 마지막 끝마무리 1%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대충대충’, ‘적당주의’, 무질서와 무관심 그리고 무조건 빨리빨리 하려는 현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목조목 따지거나 꼼꼼히 챙겨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거나,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적당주의식 대처방식이 더 대범하고 인정많은 것처럼 간주되곤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공중전화가 동전을 끌껴 삼켜버려도, 슈퍼마켓 영수증에 돈이 좀 잘못 찍혀도, 도로에 난 구덩이로 인하여 좀 피해를 입어도, 보고

문서에 한 두자 오탈자가 있어도, 아이들이 좀 버릇없이 굴어도, 젊은이들의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보아도... 그저 귀찮은(?) 마음에서 그냥 넘어가버리곤 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는 잘못된 일임을 알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충 봐주면 결국 그 사람(기관)은 ‘아, 대충해도 넘어가는구나’ 생각하고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잘못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고 한번 두번 눈감아 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 ‘까짓 것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뭐’ 하는 식의 사고방식, ‘나 혼자 나서 봤자 뭐 달라질 게 있겠어’ 하는 사고방식, 또는 ‘내 일도 아닌데 뭐’ 하는 식의 무반응, 무관심은 오류를 바로잡기는 커녕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나빠지게 될 따름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도 꼼꼼이와 거리가 먼 표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충 넘어갑시다. 그 정도로 해둬시

다. 대강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애교로 봐주지. 어지간하면...” 등 수없이 많다. 이런 말과 글들이 결국 우리의 꼼꼼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따지고 신고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가? 물론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성향에 달려있겠지만 사회제도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영국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일이다. 모처럼 초대한 손님 접대를 위해 쇼핑을 하게 되었다.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다가 문득 영수증을 살펴보게 되었다. 평소에는 무심코 넘어가곤 했는데 이날따라 여러 품목 중에서 반액 세일한다는 표시를 보고 모처럼 큰 맘 먹고 구입한 와인 값이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다말고 다시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서 계산대 옆에 마련된 안내원에게 찾아가 얘기했다니 확인해 보고는 손님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곳에 주소, 성명, 연락처를 적어달라는 것이다. ‘틀린 차액만 내주면 됐지, 왜 귀찮게 하지?’ 하는 식의 불만을 가져보면서도 요구에 따라 순순히 내용을 기록해 주었다. 그랬더니, 본인들의 실수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

다고 거듭거듭 사과하면서 잘못된 차액을 내주고, 동시에 잘못 계산된 제품과 꼭 같은 제품 1병을 덤으로 주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자기를 잘못으로 손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안겨준 데 대한 작은 보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영국에서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잘못된 영수증과 물건을 가지고 슈퍼마켓을 찾아가셨던 경험이 있다. 물론 앞에서와 같은 친절을 기대하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체인망이 있는 꽤 큰 슈퍼마켓인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바빠 죽겠는데 별걸로 다 귀찮게 한다는 식의 종업원의 태도에 그만 질려 버리고 말았다. 이런 행태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결국 마음 좋은(?) 소비자의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봐주는 풍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제점은 종종 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국내기업이 일본에 납품한 고속도로 방음벽이 설치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녹물이 나고 조기에 부식되어 납품이 중단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제품을 가공한 직원의 적당한 뒷손질이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적당주의가 결국 아파트, 백화점, 다리 붕괴 같은 대형사고를 불러오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다행히, 우리는 지난 97년 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서의 개혁의 대열에 온 국민이 동참하여 오늘 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해도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슬로건을 내걸고 목청껏 구호를 외쳐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달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의 Cyber Forum 코너에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주제인 ‘꼼꼼이 운동’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

## 21세기 話頭—바이오 & 디지털



이수화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

스필버그 감독의 '쥬라기공원'이란 영화에서 공룡이 현대 과학의 기술로 다시 만들어진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영화속 내용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바이오(bio)산업과 디지털(digital)산업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생물체를 원하는 형태로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영화를 통해 인간의 서로 상반된 두 얼굴을 보게 되었다. 하나는 과학의 발달로 신의 영역인 생명 현상까지도 인간이 간섭하고 조작하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려는 과학 만능주의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과학의 밑바탕에 도덕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이성적인 얼굴을 보게

되었다. 과학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과학은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 비밀을 분석하여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중 게놈(GENOME) 프로젝트는 사람·동물·식물·미생물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원대한 계획하에 추진중으로 2001년경에는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다고 한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당뇨·암 등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정신병에 관계되는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교체하여 정신병 치료도 가능하다고 한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맛 좋고 질병에 강하며 수확량도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여 인류의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이오기술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을 이용한 인간 복제, 특정 인종의 유전자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생산 등 비윤리적인 유전자 복제 및 남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디지털기술도 과학 발전을 앞당기고 정

보의 교류를 통한 인류 평등에 크게 기여한 면도 없지 않지만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면도 적지 않다.

이런 면에서 과학은 매우 뚜렷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윤리와 철학이 없는 과학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매우 위험하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종착점은 어디이겠는가? 바이오기술과 디지털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리와 철학의 바탕 위에 과학이 있어야 한다.

농림부는 98년 제3회 농업인의 날에 친환경농업을 선포하고, 친환경직접지불제, 병충해 종합관리(IPM)와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체제를 정착시키고 미생물농약 개발·보급 및 천적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정보화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디지털경제에 동참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바이오기술과 디지털기술이 국가의 생존권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E-mail:leesh@maf/go.kr, 개인 홈페이지:http://www.millennium.pe.kr)

# 바다, 그 무한한 가능성에의 도전



이갑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많은 미래 학자들은 21 세기를 해양의 세기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해양의 개발과 이용이 국부의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 국부의 원천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던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양 국가들이었다.

그런데 21 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새삼스레 해양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다가 앞으로 인류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인구문제, 자원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생물 · 광물 · 에너지

등 엄청난 자원의 보고이다. 해양 생물은 전 지구 동식물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심해저에 부존된 망간 · 니켈 · 코발트 · 구리 등 고부가가치 광물자원과 석유 · 천연가스 · 메탄수화물 등의 이용가능연수는 육지의 수십 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해수 자체에는 막대한 양의 염분 · 금 · 우라늄 · 리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바다의 조력 · 파력 · 조류 · 온도차 등을 이용한 무공해 청정에너지 생산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더구나 바다공간자원은 과밀하고 협소한 육지를 대체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광 · 레저 · 스포츠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편, 금세기말에 불어닥친 기상재해도 세계가 바다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GOS(Global Observation System)도 바다의 수온변화를 예측하여 엘니뇨로 인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게다가 지난 94년에는 '바다

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었다.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에 대하여 200 해리 이내의 바다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해양개발 노력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연안국이 자국 연안의 해양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게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해양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해양개발은 선택이 아닌,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면적에 과밀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양개발에 관한 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관할해역은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며, 3,200여개의 도서와 1만 1,542km의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수심 20m 이내 연안해역이 국토면적의 21%인 2만 1천 km<sup>2</sup>에 달한다.

우리나라 대륙붕의 일부 광구

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석유,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태평양의 클라리온-클리퍼튼 해역에서는 남한면적의 4분의 3에 달하는 망간단괴 광구 7만5천km<sup>2</sup>를 확보하였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력에너지 부존량은 650만kw가량, 전 연안의 파력에너지는 550만kw로 추산되며 포항 앞바다는 해양온도차 발전의 적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생산력은 연간 약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개발을 통한 국부(國富) 창출 잠재력과 일류해양국가로의 도약 가능성은 이러한 몇 개의 지표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수준과 해양개발능력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연근해 어족자원의 고갈과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조업제한으로 우리나라 '잡는 어업'의 여건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량도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목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해양생물로부터 유용물질을 추출하여 의약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의 하나로서 이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빈약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태평양지역에 확보된 광구에 대한 정밀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채광, 제련기술도 개발중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상업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탐사기술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상업용 발전소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구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를 대체할 청정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향후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면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너지 개발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조력발전 타당성 검토 등과 같은 조사작업만이 진행되어 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경제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은 해양공간 활용에 좋은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향후 해양은 해상도시·공항·저장기지·해중공원 등 새롭고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술개발에 따라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연안역 공간자원의 개발이나 이용기술은 중간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및 정온해역조성 기술 등 응용기술분야는 아직 연구 초기단계에 있다.

이제 우리는 해양에 부존되어 있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인구의 증가, 폭발적인 산업자원 수요의 증가, 그에 수반되는 육상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해양은 다양한 자원의 보고로서 활용범위와 개발 가능영역이 매우 넓어 중장기적인 종합계획과 체계적인 정책방향의 수립 없이는 효율적인 이용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해양시대를 맞아, 해양 산업의 재창조와 혁신을 위하여 새 천년의 해양비전을 제시할 중장기 해양발전기본계획(Ocean Korea 21)을 준비중에 있다. 이 계획에는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비전과 추진전략, 정책과제 등이 담길 것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이라는 숙명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바다를 개척하는 길 뿐이다. 이제 우리는 진취적인 해양개척정신과 해양과학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21세기 해양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일류해양국가라는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 —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



## 산업평화 정착을 앞당긴다

노동부 노사협력관실은 우리나라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뜨거운 현안인 노사갈등 문제를 담당한다. 노사협력관실은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수습'을 위해 실별한 노사분규 현장에 들어가 노와 사 양측을 오가며 대화를 주선하고 설득하는 등 우리 노동현장에 산업평화가 정착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글 · 김경무 / 객원기자(한겨레신문 기자)

**‘處** 變不驚’. 최근 들어 노동부 노사협력관실의 김성중 국장 사무실 칠판에는 이런 한자문구가 쓰여 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변화된 환경에 처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75년 친미 베트남정권이 무너지고 사회주의정권이 들어서자,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 당시 자유중국 쪽에서 처음 쓴 표현이라고 한다.

평소 漢詩에 조예가 깊은 김국장이 이런 한자문구를 써놓은 것은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파동 이후, 노사분규 현장에서 우리 근로감독관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우리 본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전과 달리 노조간부나 노동자들의 시선이 매우 따가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조사해서 검찰에 보고할 것이냐’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그래도 노동부는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호민관’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업무여건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김 국장은 ‘파업유도 발언’ 이후 전혀 달라진 산업현장 분위기 속에서 일해야 하는 본부직원과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을 다

독거리기 위해서 ‘처변불경’이라는 문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노사협력관실은 노사조정담당관실 1과 21명이 근무하는 비교적 작은 국이지만, 우리나라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뜨거운 현안인 노사갈등 문제를 다루는 부서이다.

주요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수습’이 그중 핵심이라고 임무송 노사조정담당관은 말한다. 이를 위해 노사조정담당관실은 노동운동의 양대산맥 중의 하나인 민주노총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노사분규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협력관실은 밤낮 없이 노동계 동향을 주시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매일매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정식퇴근’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며, 심지어 ‘튼튼한 체력이 없으면 오래 버티기 어려운 부서’로까지 알려져 있다. 때문에 노동부 안에서 근로감독관이나 사무관들이 기피하는 ‘3D부서’의 하나로 소문이나 있을 정도다.

전국 어느 산업현장에서든지 심각한 노사갈등이 발생하면 노사협력관실에는 바로 ‘비상’이 걸린다.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결해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129건, 올해만도 10월12

일 현재 16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은 97년에는 무려 2조 9,929억원에 달했으며, 외환위기 후에는 다소 줄어 98년에는 1조 6,363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늘어 지난 6월말 현재 1조 2,62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사분규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사협력관실은 그만큼 바쁘고 힘들게 일해야 한다. 지난해 정리해고(고용조정)를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갈등을 빚은 현대자동차(주) 사태의 경우를 보자.

당시 현대자동차 노조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에 반발해 5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간헐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파업을 실시했다. 사측은 98년초를 기준으로 노동자 4만 6,132명의 40.6%인 1만 8,730명을 여유인력으로 분류해 이 가운데 1만 166명에 대한 고용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노조 측은 ‘단 1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버텼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법제화된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대리전 양상마저 띠게 됨으로써 더욱 그러했다.

이때 임무송 과장은 사태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울산에 ‘급파’됐으며, 보름 가량 현지에 머물면서 노사 양쪽에 설득에 설득을

지난 한해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129건, 올해만도 10월 12일 현재 167건에 이르고 있다.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은 98년도 1조6,363억원, 올해 6월말 현재 1조2,629억원에 달하고 있다.

거듭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에 나가 있지 않은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혹은 새벽까지 사무실을 지키며 상황변화에 대비해야 했다.

심지어 병까지 나서 입원한 경우도 있다. 오랜 동안 민주노총을 담당하던 이성희 근로감독관은 과중한 업무 탓에 병이 나 몇 달 전 병원에 드러눕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노사협력관실 내 상황실의 경우 매일 오전 6시께 출근해 보통 밤 11시께 퇴근하는 것이 보통으로 노동부 안에서 가장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으레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해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

김성중 국장을 비롯해 노사협력관실 직원들은 수시로 노조간부들을 만나 소주잔까지 곁들이며 그들의 애로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5일 김 국장 등이 단병호 위원장, 이수호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새 지도부와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은 그런 자리였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노동부 간부진과 민주노총 쪽의 첫 만남으로 상당히 뜻있는 자리였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정리하고 철폐' 투쟁을 벌이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공식적으로는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했지만, 노사협력관실은 물밑



에서 지도부와 접촉해 그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노사협력관실은 '1국 1담당관 5사무관' 체제이다.

행정고시 19회 출신인 김성중 국장(46·2급)은 지난 4월 13일 노사협력관으로 취임했다. 노동부 안에서 그는 '어려운 일만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된 지난해 고용보험심의관으로서 고용보험의 확대적용 등 상당히 큰일을 무리 없이 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노동법 개정작업을 이끌기도 했다.

산업보건과장 때에는 원진래이온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노사협의과장 때에는 노사협력 캠페인을 벌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평소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소신으로 생각해 틈만 나면 이를 강조하는 김 국장은 넉넉하고 푸근한 인품으로 직원들로부터도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임무송 과장(36·4급)은 행시 32회 출신으로 노사협력관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영국 런던대 정경대에서 노사관계학을 공부하는 등 노사관계에 대해 상당한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베테랑'이다. 노정과 총괄서기관으로 있다가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이 격화됐



지난 8월 26일 열린 현대반도체(주) 노사대화합출발결의대회

던 지난해 7월 30일 노사조정 담당관으로 전격 발탁돼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뛰었다. 그래서 노동부 안에서는 가장 굵은 일과 고생을 많이 하는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영재 상황실장(52·5급)은 20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과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내고 본부 감사실에서 근무하였다.

정민오 사무관(34·5급)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다. 노사관계개혁 위원회와 노정국 노사협의과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주무계장을 맡고 있다.

정병원 사무관(48·5급)은 근로감독관 시절 수많은 노사갈등을 해결해 '분규해결사'로 정평이 나있다. 안양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을 지냈으며, 송실대 노사관계대학원을 나왔다.

김은철 사무관(30·5급)은 행시 39회 출신으로 연세대 정외과를 나왔다. 임금복지과에서 근무했으며 '법령 해석' 일을 맡고 있다.

최종석 사무관(29·5급)은 행시 39회 출신으로 민주노총을 담당하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다.

노사협력관실은 현재 민주노총의 정부쪽 대화창구로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아직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등 정부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법상 자격요건 미비로 범외단체로 머물고는 있다. 그럼에도 노사협력관실이 민주노총을 끌어안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 노동계의 양대산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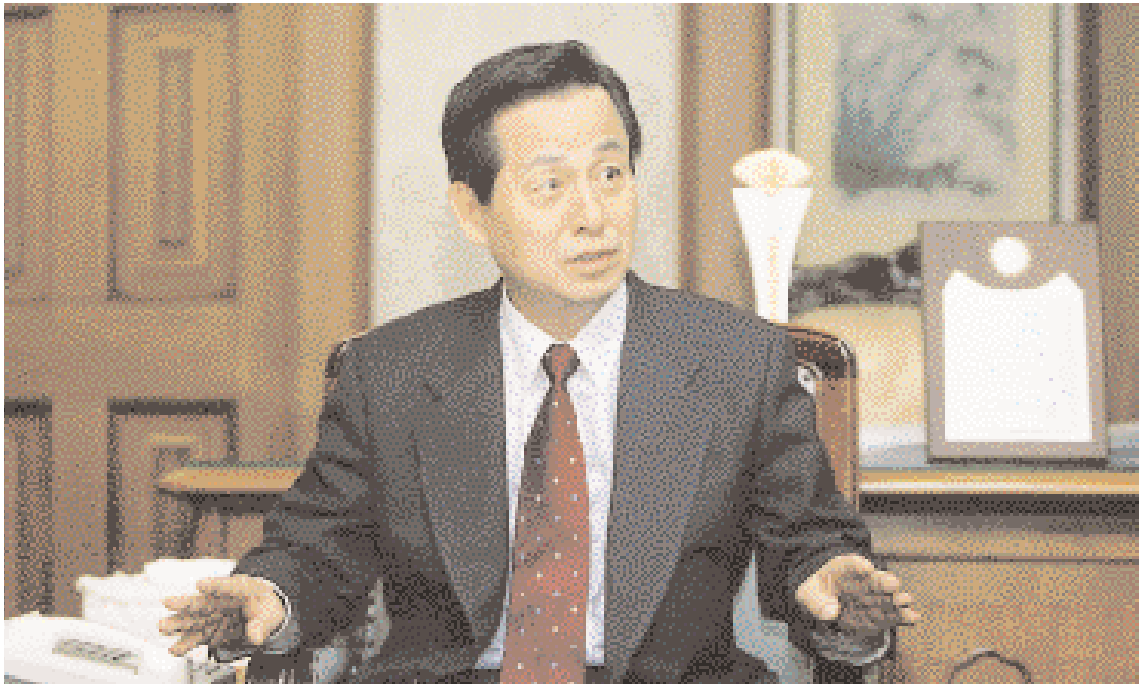
노사협력관실은 분규발생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 양쪽을 중간자적 처지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정민오 사무관

은 "노사대표간에 감정대립이 심한 상태에서 대화를 주선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사실 살벌한 파업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흥분상태에 있는 양측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사협력관실은 폭주하는 업무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형구 파업유도 발언 파동 이후 공권력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증폭돼, 올 6월 노사분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나 증가하는 등 여건이 더욱 나빠진 것이다.

노사협력관실 직원들은 그러나 '첨예한 노사대립이 사라지고 진정한 산업평화가 정착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밤낮 구분 없이 노동현장을 뛰고 있다. ■



## 김 혁 규

경 상 남 도 지 사

대담 김인철 本誌 편집장

— ‘김혁규 경상남도지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최초로 지방행정에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분이라는 점이 아닌가 합니다.

▲ 지난 93년 12월 임명직 경상남도지사로 취임할 당시, 저는 도지사가 아니라 ‘경상남도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처음으로 지방행정에 본격적인 경영행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 바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공무원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인력조정이 본격화됐을 때는 구조조정을 먼저 시작한 덕분에 피해를 덜 보았다는

안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지방행정에서는 공공성만을 강조할 뿐, 행정의 비용개념과 효율성, 생산성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경영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자치단체 무역회사인 ‘(주)경남 무역’ 설립, 도내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산동성 경남공단’ 조성, 기업영농회사와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수출농업단지 조성 등이 경상남도의 경영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 활발한 해외세일즈 활동으로 외국기업 유치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생산된 제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주요한 책무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행정, 세일즈 행정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부터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조례를 제정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외자유치 활동으로 지난해 이후 1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일본 태양유전(Taiyo Yuden), 미국 Nalco 및 Sermatech의 유치는 최초 접촉부터 투자실현까지 도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자체 최대의 성과로 자부합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의 근로자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사비용을 2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매년 두세 차례 직접 세일즈 활동을 해오고 있

습니다. 민선 도지사 취임 이후 여덟번 해외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현지 상담활동을 한 결과 18억4천만달러의 상담실적과 7억1,3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민선도지사를 두번째 하고 계신데요, 지방자치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처음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를 좀더 일찍 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지방경제가 더욱 발전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선지사 시절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해도 끝을 맺지 못하는 등 업무 단절이 많아 도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예산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아래서는 주민의 지지와 존경을 바탕으로 일을 해야 하고 시도는 시도끼리, 시군은 시군끼리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능력이나 자질면에서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보다 못하다는 노파심이 중앙정부 관리에게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도전의식은 중앙정부의 공무원보다 지방이 보다 앞서가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초창기에 있고 지방정부가 중앙에 대해 너무 급격한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많이 이루어

어지고 있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려고 하는 자세 등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F-3 코리아 그랑프리'가 창원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좀 생소한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자동차생산 국가 중에서 모터카 대회가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F-3 코리아 그랑프리'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행사로 손꼽히는 세계적 모터스포츠 행사입니다.

경상남도가 국내 최초로 'F-3 코리아 그랑프리'를 유치함으로써 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광진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대회는 앞으로 5년간 매년 개최되는데, 이번 대회기간중에 연인원 5만여명이 창원을 찾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의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이 국책 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오랜 기간에 걸친 방대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첨단기계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경상남도 생존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4,200억원을 투자해서 기계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을 기필코 성공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계박람회도 서울과 함께 격년제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기계산업육성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 기계산업 및 타 산업으로 파급 효과도 대단히 커서 2010년에는 설계엔지니어링, 기계자동화 등 기술발전효과가 선진국 대비 현재의



40~50% 수준에서 80~90% 수준에 이르고, 경제성장효과면에서도 기계산업수출 비중은 현재 26%에서 50%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도정을 떠나가시는 데 있어 어디에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 첫째는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 부문입니다. 11월말에 시작되는 WTO 뉴라운드 협상으로 농·수산 부문이 완전히 개방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으로의 농·축·수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만 5억 7천만달러의 일본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일본으로의 농·축·수산물 총 수출량의 23%에 달하는 양입니다. 2002년까지 이를 연간 약 10억달러(1조2천억원)로 늘릴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계산업이고, 세번째가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산업입니다. 관광·서비스산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산업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관광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로수도 상록수로 바꾸는 등 경남을 전원도시로 바꾸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협정과 WTO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간의 무역자유화 또는 경제통합을 위한 지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9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WTO에 통보된 약 120개의 지역협정 중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MERCOSUR(남미자유무역지대), CEFTA(중유럽자유무역협정) 등을 비롯한 80개 이상의 지역협정이 1990년 이후에 체결되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역협정 회원국간 무역은 이미 세계무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협정 체결 움직임은 세계 전지역에서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여부를 막론하고 공통된 현상이다. 134개 WTO 회원국 중 지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한국·일본·홍콩 등 3개국에 불과하다.

90년대 이후 지역협정이 이처럼 급속하게 확산된 것은 냉전종식에 따라 지역차원에서의 정치·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된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으며,



최경림

駐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협정의 확산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는 세계 무역이 몇 개의 거대한 지역블럭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 지역협정, 9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

지역협정의 확산에 비례하여 지역협정과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협정의 확산 현상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으로부터의 중요한 일탈이다. 지역협정의 당사국간에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반면, 비당사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차별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근본원칙의 하나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키는 지역협정의 체결을 허용하였으며, GATT의 후신인 WTO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서구국가간에 체결되었던 거의 모든 무역협정은 최혜국대우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협정 가입국이 여타국과 관세동맹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다. GATT는 이러한 전통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지역협정이 무역원칙에 의해서만 판단하기 어려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지역협정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50년대 이후 EC 형성을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는 상태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지역협정의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와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이를 실증적으로 산출하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협정의 당사국들은 지역차원에서의 무역자유화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자유화를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갖는다는 점도 자주 지적한다.

GATT 협정의 입안자들은 지역협정이 최혜국대우로부터의 예외라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지역협정의 요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이 요건들은 WTO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역협정에 관한 WTO의 규정은 GATT 제24조, GATS(서비스협정) 제5조 그리고 개도국 특별대우에 관한 Enabling Clause 등 세 가지가 있다.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는 대상분야가 다

WTO 회원국간에는 뉴라운드에서 지역협정문제를 해결하지는 의견이 최근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규정의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지역협정 문제가 뉴라운드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르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우선 지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역외국에 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이 전체적으로 그 전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회원국간에는 '거의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지역협정을 체결했을 때는 이를 WTO에 통보하여,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GATT 제24조의 '거의 모든 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GATT 제24조가 관세와 함께 거론하고 있는 '기타 무역장벽'이 어떤 제도나 조치를 포함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WTO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협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규정의 해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회원국간 입장의 대립으로 진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 지역협정문제, 뉴라운드 의제에 포함될 듯

규정 해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WTO가 지역협정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GATT에서는 지역협정별로 작업반을 설치하여 해당 협정이 GATT 제2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였으나, 규정 해석에 대한 회

원국간 이견으로 작업반이 설치된 총 90여개의 지역 협정 중 6개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렸을 뿐이다.

WTO에서는 지역협정위원회가 개별 협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1995년 WTO 출범후 심사를 시작한 60개 이상의 지역협정 중 결론을 내린 협정은 아직 하나도 없다.

최근 WTO 회원국간에는 2000년에 시작되는 뉴라운드에서 지역협정 문제를 해결하지는 의견이 폭 넓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협정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 보았자 성과가 없을 것이므로 뉴라운드 협상의 일환으로 지역협정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지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일본·홍콩·호주·뉴질랜드·인도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은 지역협정의 확산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협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협정 관련 규정의 명료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제의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반응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거의 모든 회원국이 규정의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지역협정 문제를 뉴라운드의 의제에 포함하지는 데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도 없기 때문에 지역협정 문제가 뉴라운드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뉴라운드를 통해 지역협정 관련 규정이 충분히 명확해지고 개선될 것인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substantially all the trade'와 같이 추상적인 요건에 관하여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하기도 어렵거니와, 대부분의 지역협정 당사국들은 관련 기준과 지역협정에 대한 WTO의 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역협정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속한다는 점도 규정의 명료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지역협정의 급속한 확산 추세와 함께 우리 경제가 이제는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갖추었음을 고려하여 일부 국가와의 지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역협정 체결을 통한 상대국과의 자유무역은 우리의 개방정책과 합치하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 및 해외 투자 기반의 확보, 해외투자 유치 확대, 나아가 정치·경제적 유대관계의 강화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하에서 정부는 우선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여타국과의 지역협정 체결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지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지역협정에 대한 우리 입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WTO 내에서 지역협정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를 요구해 왔지만, 이제 우리가 지역협정의 당사국이 되려고 하면서도 계속 지역협정에 대한 통제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일본·중국·EU 등과 지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까지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 무역의 대부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자간 무역체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자무역체제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 규정의 명료화는 지역협정의 당사국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하다.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상태는 제도의 안정성 확보라는 공통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

# 뉴라운드 출범과 대응 방안



**이시형**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W**TO는 종전의 GATT와 달리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해 정해진 시기 또는 주기적으로 회원국 간 무역협상을 추진하도록 해당 협정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96년경부터 EU를 비롯한 일부 WTO 회원국들은 약속된 분야의 무역자유화 협상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의 관심사항을 두루 반영하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고, 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올해 11월 30일~12월 3일 시애틀에서 개최될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출범시킨다는 목표하에 뉴라운드에서 다루게 될 협상의 범위와 원칙, 추진방법, 협상기간 등에 대한 협의가 제네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UR의 후속과제로서 이미 의제로 확정된 농업·서비스 분야 외에 공산품의 관세인하협상을 추진한다는 데 대하여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직도 협상의제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협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이며, 협상의 모든 결과를 모

든 참여국이 동시에 수락하는 소위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채택하자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뉴라운드의 협상원칙, 의제범위, 협상기간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담게 될 각료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이 11월말 각료회의 시까지 계속될 것이다.

## 11월말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 예정

미국은 뉴라운드에서는 농업·서비스·공산품 분야만을 의제로 하여 3년 이내 신속히 자유화협상을 종결하자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고, 국내보조도 대폭 감축하며, 관세율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반덤핑협정의 개정, 경쟁정책 분야에 대한 규범제정, 섬유분야에 대한 재협상 등에 대하여는 미국내 정치권이나 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의제로 도저히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WTO에서 논의하던 일부 사항을 마무리하여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WTO의 성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분야로서 전자상

거래에 대한 무관세관행의 연장, 정부조달 투명성협정 체결, APEC에서 논의하던 자유화 품목에 대한 조기자유화 실현 등을 추진중이다. 현재 각국의 반응으로 보아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관행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견무역국 대다수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 외에도 96년 12월 제1차 WTO 각료회의 이래 계속 논의중인 무역과 투자, 경쟁정책 등에 대한 규범제정 문제도 뉴라운드 의제로 다루어 포괄적 협상이 되어야만 모든 참여국의 이해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다수의 개도국들은 반덤핑조치의 남용이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보고 반덤핑협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도·이집트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UR협정의 결과가 개도국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지 못하였다는 기본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WTO의 여러 협정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취하기로 한 특별대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전에는 새로운 분야의 자유화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이행문제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UR협상 결과에 대한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선진국들로서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로 보아서는 일단 시애틀 각료회의시까지 합의가 가능한 사항(예 : 기술지원방안, 최빈개도국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선언 등)에 대하여는 각료회의 합의사항으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료회의 후 1년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치방향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존협정 이행문제와 개도국의 최대 관심사항

개도국의 최대 관심사항인 기존협정의 이행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은 모든 WTO 회원국들이 참

뉴라운드 협상은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자유화, 공산품의 일부 고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이슈가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과 '케언즈 그룹' 국가들이 수출보조의 전면철폐와 관세의 대폭적인 삭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농산물 수입국 진영의 대처가 힘겨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하는 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과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국가들이 뉴라운드에서의 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주요국간에도 의견차이가 있으며, 개도국들의 반발이 강한 점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과제로 유지하자는 견해가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수산업 분야의 보조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미국·유럽과 많은 개도국 사이에 대두되고 있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분야 보조금도 환경보호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환경문제와 보조금폐지문제의 연계주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문제에 있어서는 EU가 의제 채택을 계속 희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지난 1996년의 제1차 WTO 각료회의시 노동문제는 ILO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경하므로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뉴라운드 협상의 범위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자유화, 공산품의 일부 고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이슈가 핵심이 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은 물론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 그룹' 국가들이 수출보조의 전면철폐와 관세의 대폭적인 삭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농산물 수입국 진영의 대치가 힘겹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쌀 문제는 UR협상의 결과에 따라 2004년말까지는 UR협상 당시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1~4%(95년부터 단계적 증량)만 매년 수입하면 그 이상은 개방하지 않아도 되며, 그 이후의 개방 여부에 대하여는 2004년중 각국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4월 1일자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하였고 우리나라만이 쌀에 대한 관세화초치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조기에 쌀 수입을 개방하라는 요구가 일부 수출국으로부터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분야별로 관련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정부는 뉴라운드 논의 초기단계인 98년 7월부터 정부내에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의 담당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면서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는 농업·서비스·공산품·반덤핑·뉴이슈(투자·환경 등)를 각각 관장하는 5개 실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와 산하 실무대책반의 활동에는 과거 UR협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연구기관의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협상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3~9월간 회원국이 뉴라운드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출한 약 150건의 제안서 중 우리가 11건을 제출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우리 견해를 밝힌 분야는 농업, 임수산물, 서비스, 공산품, 반

덤핑, 무역과 투자, 경쟁정책, 지역협정,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5개국 내외의 WTO 주요 회원국이 참가하는 WTO내 각종 주요국 회의에 참가하여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준비단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WTO나 과거의 GATT는 전원 합의(컨센서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34개 회원국 전체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 주요국 비공식회의를 거쳐 대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는 예상의제 분야별로 견해가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과는 6월 동경에서 양국간 뉴라운드 관련 의견조율을 위한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서울에서 2차 협의를 개최하고, 농업·반덤핑·투자·경쟁정책 등을 중심으로 양국이 뉴라운드의 의제 채택과 향후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긴밀히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EU와는 제네바에서 다섯 차례 뉴라운드 전반에 대한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포괄적이고 균형된 뉴라운드 의제 채택과 반덤핑문제에 대한 EU측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양측의 본국 고위급 협의도 개최하였다.

반덤핑 협정의 개정문제는 일본·캐나다·아세안·홍콩·인도 등과 공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들 국가를 초청하여 향후의 공조체제를 협의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정부조달투명성 협정의 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도 공동자세를 취하는 등 분야별로 협조가 가능한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통한 협상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협상에 참가하는 정부 자세의 협상진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 민간여론 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론형성을 위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뉴라운

드 항목을 신설하여 협상준비 동향에 대한 자료와 정부의 방침을 신속하게 게재하고 있으며, 학계·업계·사회단체 등의 여론형성층 인사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고 있다.

뉴라운드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외교통상정책자문위원, 경제단체 간부, 민·관연구소장 등을 초청, 협상 준비동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학회·연구소 등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시애틀 각료회의 이전까지 각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 여론을 경청하여 향후 뉴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우리 자세 정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 ‘뉴라운드협상위원회’ 구성하여 협상 준비단계부터 적극 참여

앞으로 WTO 체제에 속해 있는 한 자유무역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며 선택사항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국부의 65%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방된 통상국가를 통상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의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자유무역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무역협상이 곧 시장개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투자·정부조달 등의 다자간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IMF 위기 이후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UR 때보다 우리의 전반적 자유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추진할 여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농업분야와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구조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방어논리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

정부는 98년 7월부터 정부 내에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면서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예상의제 분야별로 협조가 가능한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통한 협상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현실이다. 특히, 농산물 관세의 대폭인하, 각종 보조금의 추가적인 감축 등 일련의 자유화조치는 이미 UR협상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개방의 속도와 폭이 쟁점사항이므로 우리로서는 농업분야의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농업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에 대한 논리 개발 등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국들의 급진적 개방요구를 둔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농업분야에서만 계속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는 정부의 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 심화될 모든 분야의 자유화·개방화의 영향을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하여, 산업의 구조조정과 계층간 소득재분배 등 국내정책을 통해 국민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 국가채무, 우려할 수준 아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국고과장

**최** 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실상과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대책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채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채무 늘어

먼저 IMF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원리금 상환의 책임을 지는 확정채무로서 중앙정부의 채무만을 나타내거나 지방정부의 채무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주로 국채나 정부가 들여온 외국차관 등이 대표적인 국가채무이다.

국가채무에 정부의 채무보증과 한국은행의 IMF 차입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정부가 원리금 상환의 직접적 부담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채무상환금액도 확정할

수 없으며 主債務者가 상환하면 정부 부담이 되지 않는 우발적 채무이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화당국의 차입금도 재정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앞에서 살펴본 IMF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경우, 99년말 94조2천억원(GDP의 19.4%) 수준이고,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할 경우에는 약 111조8천억원(GDP의 23%)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 참조).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입재원을 국채를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와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의

〈표 1〉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

	96년	97년	98년	99년
중앙정부 채무 (대GDP비율)	36.8 (8.8)	50.5 (11.1)	71.4 (15.9)	94.2 (19.4)
지방정부 채무 (대GDP비율)	12.9 (3.1)	15.1 (3.3)	16.2 (3.6)	17.6 (3.7)
합 계 (대GDP비율)	49.7 (12.0)	65.6 (14.4)	87.6 (19.5)	111.8 (23.0)

로 금융구조조정 지원,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98년도 -5.8%에서 금년 상반기 7.3%로 급속히 상승하였고, 금년 전체적으로는 7~8% 내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실업률은 99년 2월 8.7%에서 99년말에는 5%대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용 외환보유고도 97년말 39억달러에서 99년 9월말 655억달러로 크게 확충되었다.

### 우리의 국가채무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GDP의 23% 수준인데 비하여 OECD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평균은 GDP의 약 70% 수준으로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로 조달한 자금을 정부가 정부 이외의 기관에 용자하거나 轉貸해 준 용자성 채무가 99년말 중앙정부 채무의 67%인 63조5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가채권액보다 채무액이 많은 순채무국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債權(98년말 현재 118조원)이 채무보다 많은 純債權國으로서 정부의 채무상환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97년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채무보증규모도 크게 늘어났으나, 이는 대부분 금융기관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금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입재원을 국채를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와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융구조조정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으로서 99년말 8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금융기관의 외채만기에 대한 지급보증은 지난 98년 4월 총 218억달러의 단기외채를 최장 3년까지 만기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그동안 상환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상환되고 있어 지난 10월 8일에는 87억5천만달러가 조기상환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부담 없이 2001년 상반기까지는 전액 외채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구조조정 채권의 경우에도, 64조원 중 99년 9월말 현재 55조2천억원의 채권이 발행되었으나, 매입 부실채권과 담보부동산의 국내외 매각 및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정부출자주식의 매각 등을 통하여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표 2〉 주요 국가별 국가채무 수준(98년)

[단위 : 국가채무/GDP(%)]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OECD
23.0	97.3	66.5	63.1	56.7	69.5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99. 6.

註 : 지방정부채무 포함.

### 재정적자 초기단계에서부터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일반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한번 늘어난 국가채무는

이제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만큼 적자재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세출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혁신, 기금정비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줄이기 어렵고,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도 우리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만큼 적자재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가채무규모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세출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

다 낮게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혁신, 기금정비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2000년도의 경우,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5%로 억제하여 작년보다 국채발행규모를 줄인 200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또한, 앞으로 歲計잉여금을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연도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국가채무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이후 국가채무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2004년 이전에 균형재정을 이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조세수입 등 국가세입은 한정되어 있으나, 국채 및 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비용으로 매년 국가예산의 약 10%인 10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향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새 천년 준비 등을 위하여 많은 추가적 재정지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효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세출예산의 대폭적인 조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 강화 등을 통해 고통을 감수해야만 2004년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국가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

〈표 3〉 정부의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조원, %)

	97년말	98년말	99년말 전망
차입 보증	2.0	31.3	16.1
· 금융기관 대외채무	-	29.6	14.3
채권 보증	10.9	40.5	65.1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7.0	17.4	20.5
· 예금보험기금채권	-	21.0	43.5
채무보증 합계 (GDP대비 비율)	13.0 (2.9)	72.0 (16.0)	83.0 (17.1)

〈표 4〉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전망(잠정)

(단위 : 조원, %)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10년
통합재정적자/GDP	-4.0	-3.5	-2.6	-1.7	-0.8	0.0	1.5
국가채무 GDP대비	94.2 19.4	118.8 22.7	140.9 24.7	154.7 24.9	167.2 25.0	174.9 24.3	148.4 14.7

자료 : KDI 전망치

#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 —이행현황과 발전 방안



**이필재**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

1 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된 이후 2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과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이의 세부 실천방안으로서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의제 21」 제37장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96년 10월 유엔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 차원 높은 국가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의제 21」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기존의 오염방지의 수준이 아니라 천연자원·자본재·기술·인력 등 사회적 자본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이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 21」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경제, 교육·문화, 교통·통신 등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이 환경을 고려한, 또는 환경과 조화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환경친화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강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채택도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서 OECD 가입 국가로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국제적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 활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보전이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하며, 인간이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이며, 후세대를 배려하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 정책 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초개념이 되

우리나라는 96년 10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사회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

고 있기도 하다.

유엔은 「의제 21」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93년에 경제사회이사회(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 ;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여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유엔의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993년 6월에는 제1차 유엔지속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제 21」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연차별 평가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각국의 「의제 21」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997년 6월에는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지난 5년간의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이행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환경특별총회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산림보호, 핵폐기물 관리 등 일부 분야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환경악화 및 자원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이 미흡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대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등의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패턴·해양·토지자원의 통합관리 등 향후 이행이 특히 필요한 중점 추진분야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향후 5년간의 작업계획인 「의

제 21 향후 이행계획서」를 채택하였다. 리우회의 이후 10년이 되는 2002년에는 다시 특별총회를 개최하여 「의제 21」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

###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수립

각국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의제 21」이행을 위한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의제 21」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수립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사회정책을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중·장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한 계획서이다. 아울러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뿐만 아니라 리우선언에서 확인된 지구환경 문제에 관한 제원칙과 각종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CSD회의(실무회의 및 고위급회의)에 참가하여, 논의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지구환경보전 노력을 대외에 천명하고 있다. 2000년 제8차 CSD회의는 4월 24일~5월 5일간의 일정으로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며, 동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산림보전·토지이용관리 등을 논의하게 된다.

2000년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제8차 CSD회의 의제인 농업·산림·토지이용관리·재원 등이며, 농림부·건설교통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를 작성, 금년 10월중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96년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한 이후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명실상부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98년부터 동 계획의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 환경친화적인 사회 구축의 토전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이행 발전방안 마련

정부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이행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행계획 총괄 · 조정할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지구환경보전대책의 총괄 · 조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92년 7월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위원장 : 국무총리)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수립도 동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95년 6월 동 대책회의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 · 조정하는 데에는 그 기능에 한계가 있다.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의제 21」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직속의 지속개발위원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의제 21」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 ·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효율적인 이행과 각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경제개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지속가능한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지속개발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가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검토중에 있으며,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설치 여부, 시기 및 운영방안 등을 확정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환경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연간 100회 이상 개최되는 각종 지구환경문제 관련 국제회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며,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구환경 관련 연구기능을 통합한 가칭 「지구환경종합연구센터」 설립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촉진

현재 「의제 21」과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정부 부처와 국민의 인식이 낮아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및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이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 우선적으로 환경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 · 민간단체 등의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심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추진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목표에 대한 추진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98년부터 실시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구체적 이행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96년 범정부 차원에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로 지속가능한 개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 ·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 차원이 아닌 분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이 대외홍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야별·정책수단별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2000년부터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각 장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계획과의 연계 증진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자원의 보존 및 관리 부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이 많으나, 지방정부의 환경계획 수립시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제 21 국가실천계획」과 「지방의제 21」 추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방의제 21」 이행계획 수립시 국가실천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의 실효성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의 정보·자료 교환을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정보교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의제 21」 추진실적의 정례 평가 및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노력을 지원·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속개발지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속개발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논의에 있어서 주요그룹의 역할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구환경보전의 실행주체인 산업계·민간단체·농민·여성·과학기술계 등 주요그룹의 이해와 실천이 필수적이거나, 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주요그룹이 지속가능한 개발실현을 위한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의제 21」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및 이행실적 평가 등 「의제 21」 이행 관련 정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요그룹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이 대외홍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환경협약이 점차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성격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노력은 국제환경협상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함께,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하여 동 계획이 명실상부한 지속개발전략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차세대 이동통신 정책 방향



**임종태**  
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장

**현** 재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은 아나로그 기술방식보다 좀더 많은 가입자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다양한 통신방식이 존재하고 방식별로 호환성이 없어 하나의 단말기로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기존의 방식은 음성통화 위주로 구현되어 있어 무선을 통하여 고도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하나의 단말기로 세계 어디서나 음성·영상·데이터 등 멀티미디어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혁명적인 통신서비스인 IMT-2000 서비스 구현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하나의 단말기로 세계 어디서나 멀티미디어 통신 가능한 IMT-2000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ITU는 92년 3월 에 WRC-92(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92)에서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지

정하였으며, 99년말까지 세계 공통의 표준규격 마련을 위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98년 이후 미국과 유럽·일본이 각각 서로 다른 동기방식(CDMA 2000)과 비동기방식(WCDMA)을 주장하여 단일 표준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더욱이 98년 12월 유럽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비동기방식(WCDMA) 중심의 상세규격 작성을 위해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라는 비공식 단체를 구성하자 미국도 1999년 2월 동기방식(CDMA2000)을 중심으로 상세규격을 작성하는 3GPP-2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세계적으로 CDMA 관련 특허의 최대 보유회사인 퀄컴과 비동기방식 관련 특허의 최대 보유회사인 에릭슨이 자신의 특허기술을 제한적으로 허락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IMT-2000 표준화작업이 난항을 겪게 되었으나, 99년 3월 에릭슨이 퀄컴의 장비제조 분야의 생산설비와 R&D 부문을 매입하는 등 양사간 전략적 제휴를 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표준논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IMT-2000 표준화 활

하나의 단말기로  
 세계 어디서나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한 IMT-2000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내 관련 업체가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6월까지 사업자 수, 사업자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고  
 IMT-2000용 주파수를 공고할  
 계획이다.

성화를 위해 99년 1월 OHG (Operators Harmonization Group)라는 비공식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유럽과 미국의 업체 및 정부간 회의인 TABD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에서 OHG 활동을 지지함으로써 IMT-2000 통합안 마련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결국 OHG는 5차에 걸친 회의 결과 99년 6월 IMT-2000 통합안을 마련하였고, ITU, 3GPP, 3GPP-2는 이를 수용기로 결정하여 IMT-2000 표준안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었다. OHG의 통합안은 CDMA 교환기와 GSM (Global System Mobile Communication) 교환기를 모두 지원하는 세 가지 모드의 무선접속규격(DS모드, MC모드, TDD모드)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자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DS(Direct Spread)모드는 유럽·일본의

〈표 1〉 IMT-2000 서비스 범위

	기존 이동전화	IMT-2000
데이터 전송속도	14.4Kbps	144K(차량), 384K(보행), 2Mbps(정지시)
제공서비스 (사례)	음성·E-mail	음성·E-mail·인터넷·영상전화·Teleshopping

WCDMA 방식을 위주로, MC(Multi Carrier)모드는 미국의 CDMA2000 방식 위주로 규격화됨에 따라 기존의 GSM사업자는 DS모드를, CDMA사업자는 MC모드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TDD (Time Division Duplex)는 데이터전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IMT-2000 주파수 대역 중 일부 대역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통합표준안 중 DS모드가 CDMA 교환기에 연결되기 위한 규격과 MC모드가 GSM 교환기에 연결되기 위한 규격(Hook & Extension) 작성 작업이 미진하였으나 미국의 스프린트, 일본의 DDI, IDO 등의 사업자가 자사가 보유한 CDMA망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규격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3GPP와 3GPP-2는 각각 99년 8월과 9월에 Hook & Extension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워크숍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표준화 및 시장향배가 차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IMT-2000 표준화에 적극 대처하여 향후 시장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중심으로 관련업체가 ITU, 3GPP, 3GPP-2에 가입하여 표준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모두 CDMA 방식의 망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DS모드를 CDMA망에 접속하기 위한 규격(Hook & Extension)의 표준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TTA는 Ad-hoc 그룹을 구성하여 3GPP 등에 우리의 입장반영을 위한 기고서 작성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통신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제1차 IMT-2000 표준화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여 세계 표준화동향, 표준방식별 기술동향 및 시장전망,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내 IMT-2000 표준화

와 관련하여 워크숍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기방식 기술은 2000년경,  
비동기방식은 2002년 전후로 확보**

우리나라는 CDMA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기술 개발 및 서비스 도입을 바탕으로 99년 8월 현재 2천만명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하였고, CDMA 단말기 및 관련장비의 내수충족은 물론 수출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98년에는 6억 6천만달러, 99년 상반기 9억달러에 이어 금년 말까지 20억달러 수출이 예상되는 등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활성화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관련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97년부터 정부 245억원, 업체 302억원 등 총 547억원을 투입하여 한국 전자통신연구소(ETRI)를 중심으로 99년말까지 동기방식 기술을 위주로 한 표준모델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개발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국내 제조업체도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이동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동기방식의 상용화 기술을 상당부분 확보하였다.

그러나 ETRI와 국내 업체는 미국 방식

〈표 2〉 각국의 IMT-2000 정책방향

	주요 원칙 또는 여건	서비스 개시시기	사업자 허가시기	주파수 해부방법	사업자 선정방법	이동전화 사업자 수 및 보급률
일본	· 제2세대 주파수 포화로 IMT-2000 조기 도입	2001년중	99년말	3개×20MHz	비교심사 선호	8개 38.5%
미국	· IMT-2000 주파수를 PCS용으로 기할당 · PCS사업자는 IMT-2000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음.	업체 자율	업체 자율	· 일부: 97년경매 (3개×15MHz) · 추가: 검토중	경매제 (경매제)	5개 (지역별) 25.9%
영국	· IMT-2000을 신규 서비스로 규정 · 경쟁촉진 위해 1개 이상의 신규 사업자 포함 · 2세대 주파수 포화로 조기도입	2002년	1999.10~ 2000.2	3개×10MHz 1개×15MHz 1개×15MHz	가격경쟁	4개 27.6%
프랑스	· IMT-2000을 신규 서비스로 규정	2002년	1999~ 2000년	4개×15MHz	비교심사 (선호)	3개 23.2%
독일	· IMT-2000이 데이터 위주의 서비스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01년말	1999년말	4~6개: 10MHz 또는 15MHz씩	가격경쟁	4개 21.2%
핀란드	· 99년 3월 18일 세계 최초로 IMT-2000 사업자 선정	2002년 (예상)	99.3.18	4개×15MHz	비교심사	3개 61.9%
스웨덴	· 최초 2~3개 사업자 허가후 2~3년후 추가 허가 검토	2002년 (예상)	2000년 1/4분기중	15MHz씩	비교심사	3개 51.9%

註: 미국은 98년말, 나머지 국가는 99년 5월말 기준

IMT-2000 통합표준안이 출현한 만큼 정부에서도 비동기방식의 핵심기술인 모뎀개발에 2001년까지 총 290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러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상용시스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ETRI 및 국내 관련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하였다.

(CDMA2000)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비동기방식과 동기방식을 통합한 OHG의 IMT-2000 통합표준안이 출현한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되며, 경쟁력을 갖춘 에릭슨·노키아 등이 버티고 있는 유럽·일본 방식의 비동기방식의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에서도 비동기방식의 핵심기술인 모뎀개발에 99년도에 50억원 등 2001년까지 총 290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러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상용시스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ETRI 및 국내 관련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동기방식 기술의 시범서비스를 2000년경에 선보일 수 있고, 2002년 전후로 유럽·일본 방식의 상용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00년말에 사업자 선정 완료

IMT-2000 표준화와는 별개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사용중인 이동전화망의 수용용량 한계로 IMT-2000 서비스 도입을 가장 서두르고 있다. 또한 2세대(디지털) 이동통신방식으로 자국의 고유한 방식인 PDC (Personal Digital Cellular)를 사용하여 일본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판단하에 IMT-2000에서는 세계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ITU가 정하는 모든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자 선정과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1999년말에서 2000년초에 3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각각 20MHz씩 할당하여 2001년 3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IMT-2000의 표준방식에 대해서는 99년 6월에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9월로 연기하였다. 우정성은 표준결정 지연의 이유를 미국의 표준규격작성 지연 및 현재 사용중인 PHS시스템과 IMT-2000시스템 간의 간섭문제의 미해결을 들고 있다.

미국은 IMT-2000 주파수대역의 상당부분을 이미 PCS에 사용하고 있으며 PCS사업자가 IMT-2000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스프린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자는 현재까지 투자한 이동통신망을 자연스럽게 진화시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IMT-2000서비스를 구현하려는 전략이다.

EU는 IMT-2000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적극 주도하고 있으며 핀란드도 99년 3월 4개의 IMT-2000 사업자를 세계 최초로 선정하였다. 또한 EU는 IMT-2000 서비스를 신규서비스로 규정하여 최소한 1개 신규사업자를 포함하고 2000년 1월까지 허가절차를 완료, 2002년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토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동향과 국내 기술개발 추세를 고려하여 99년 7월에 IMT-2000 정책추진 일정을 발표하였다. 즉, 2000년 6월까지 사업자 수, 사업자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정부의 방침을 확정하고 IMT-2000용 주파수를 공고할 계획이며, 2000년 9월까지 사업자가 신청을 접수하여 2000년말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

# 유도탄 구매 사업비 절약

이일순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병기처장

이도원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중령

## 1. 유도탄 수송수단 변경을 통한 예산절약

국방부는 전력 증강을 위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영국 등으로부터 외자 조달을 하고 있다. 외자 조달은 판매경로, 무기인도조건, 수송방법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대리하는 정부 대 정부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에 의한 구매와 일반제조업체와의 상거래인 상업 구매(CS ; Commercial Procurement)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대외 안보 지원은 1961년에 제정된 대외 지원법과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은 군사장비, 물자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차관 또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다. FMS는 미국 정부와 구매국 정부 간의 거래로 구매국의 FMS 구매요청에 의거하여 미국방성 국방조달 관계기관이 사전에 조사 판단한 예상 인도시기, 추정 가격, 판매 품목의 내용을 기재한 FMS 오퍼 제의 및 수락문서(LOA ;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작성, 구매국에 통보하여 구매국이 수락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제도이다.

창군기에 해당하는 1946년부터 1950년까지 우리 군은 일본군의 전리품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장비들을 인수받아 운용하는 정도였

으며, 한국 동란기인 1950년부터 1953년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원에만 의존해야 했고, 1954년부터는 한미방위조약(1954년 11월 17일)에 의한 무상 군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1973년 이후에는 FMS 차관자금 지원을 통한 유상 판매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미간의 방위산업 및 군사과학기술협력과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유지비 분담과 같은 방위비 분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으로써, 과거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지원에서 한·미 양국이 상호 주고 받는 쌍무적인 안보협력의 단계로 변화됨에 따라 한국의 독자적인 책임과 역할이 증대되는 위치에 접어들고 있다.

대외군사판매(FMS)는 정부 대 정부간의 계약에 의해 거래되고 판매국인 미국의 판매 절차와 조건에 따라 일방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매국은 구매 절차 및 조건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상 이익에 부합할 때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대외에 군사판매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발전을 억제하는 군사독재자에게는 군사판매를 불인정하며, 미국의 동의 없이는 대외 군사판매를 통하여 구매한 방위 물자 또는 그 소유권을 제3국에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대외판매를 결정하

였을 경우에도 14억달러 이상의 주요 무기체계, 5천만달러 이상의 일반 방위물자 및 용역 제공, 대외 군사판매물자의 제3국 양도에 대한 동의는 미의회에 필히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성립되는 FMS 구매제도는 미정부가 최초 제시하여 구매국이 수락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언제라도 LOA 상에 기록된 인도 시기, 판매 가격, 구매품목의 가용성, 대금 지불 조건 등에 대해서 미정부가 구매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더라도 구매국은 수정된 조건에 대한 수락 여부만을 결정할 따름이며, 최초 계약 불이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구매국을 대리하여 미국내 업체로부터 방위 물자 및 용역을 조달 요청해 주는 대가로 그에 수반되는 인건비, 행정비, 기타 제 잡비를 구매국에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미국의 군수물자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FMS 구매는 미 표준 장비 구매시 우방국의 소요를 통합구매하여 가격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한·미간 연합작전시 상호 무기체계의 호환성·운용성 증진 및 연합작전의 용이성, 후속 군수지원의 보장과 미정부의 품질 보증 등의 이점으로 FMS를 통하여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병기탄약창장으로 근무중, 미국에서 FMS를 통하여 함대공 유도무기 도입시 수송기관이 대한항공보다 5배 이상 고가인 미국방성 수송수단(DTS)을 사용토록 결정되어 있음을 알았다.

해군본부 관계자에게 수송업체 변경을 건의하면서, 한·미합동군사업무단장을 진해 병기탄약창장으로 초청하여 국내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수송업체 변경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협조를 약속 받았으나, 미국내의 상급 기관과 협조 결과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FMS 계약서상 수송기관이 DTS로 되어 있어 계약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다. 따

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고 FMS 계약시 미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락 또는 거부하는 양자택일의 계약 특성상 업무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신념 아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해군 관계 요원들과 공·사적으로 계속 접촉하는 한편, 해군본부 사업 주관부서에 현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 미 해군본부의 책임부서인 NAVIPO(Navy International Program Officer)와 협조토록 하였다.

또한 1998년에 NAVIPO 사령관이 해군본부 방문시 고위급간 토의를 시도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NAVIPO 사령관이 귀국하여 약속한 대로 수송업체를 DTS에서 대한항공으로 변경하는 공식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약 24만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적선이나 국적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2. 유도탄 수송용기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약

시스페로(Sea-sparrow) 함대공 유도무기 사업은 적 항공기 및 유도탄으로부터 자국함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용 유도탄을 해군 최초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유도탄을 탑재하는 함정은 우리 기술진에 의해 설계 건조한 한국형 구축함이며, 주요 성능으로는 사정거리 14.6km, 최대속력은 마하 2.5이다. 유도방식은 함정에 설치된 레이더에서 표적에 전자파를 조사해 주고 표적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전자파를 따라 함정에서 발사된 유도탄이 표적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명중률이 우수하다.

또한 함정에서 수직발사 방식으로 발사되며 표적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가능하므로 적응성이 매우 뛰어난 유도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되는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

적용된 무기로 미국 레이선(Raytheon)사에서 생산되어 미국 및 나토 회원국 등 17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

98년 최초 도입된 시스페로 유도탄에 대한 성능 시험을 지난 5월 28일 대천 앞바다에서 실시한 결과, 시속 630km로 이동중인 무인표적을 약 10km의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요격함으로써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비로소 한국해군은 요격용 유도탄을 보유하게 되어 미래 해전에서 자국함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스페로 유도탄 사업은 탑재 대상 함정의 건조 계획을 고려하여 두 차례로 나누어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내역으로는 크게 유도탄, 발사장비, 수송용 용기, 유도탄 성능검사 및 정비비를 위한 시험·정비장비, 수리부속 및 사업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예산절약을 한 부분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유도탄을 수송해 오기 위해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수송용 용기를 재활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무기나 장비 등을 구매하여 한국까지 수송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목재 박스로 포장되어 도입되나, 시스페로 유도탄의 경우에는 수송 중에 유도탄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수송용기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수송용기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유도탄 수송을 완료한 후에는 불필요한 것이나, 개당 단가가 780만 원에 이르는 매우 고가의 용기로서 재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던 중 차기 유도무기 구매사업에 수송용기를 사지 않고 미국에 빈 용기를 보내서 수송해 올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송 용기 생산비용과 미국까지의 빈 용기 수송비용의 비교를 위해 수송 대행업체에 견적을 요청한 결과 생산비용의 약 20분의 1 가격으로 미국까지 수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하여 97년 10월 한·미 유도무기 사업관리 회의시 2차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유도탄 수송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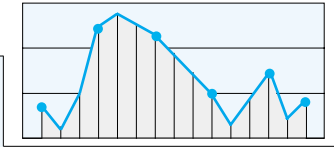
구매 비용을 계약에서 삭제하는 것을 의제로 선정하여 미국측과 협의하였다. 한국측에서 예산절약을 위해 1차 사업에서 구매한 수송용기를 미국측에 설명하고 계약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미의회의 승인을 거쳐 미군사판매제도(FMS)에 의해 계약된 사업내용 중 하나의 항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복잡하다는 설명과 함께 귀국 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 후 통보해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차후 지속적인 진행현황 확인과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회의시에 합의된 내용을 '추진합의사항(Action Item)'으로 정리하여 양측이 서명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진행현황을 미국측에서 통보해 주도록 조치하였다. 사실, 미국측의 입장에서 판매물량이 감소하는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더 꺼림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후, 98년 2월 및 8월에 함대공 유도무기 정비 공장 감리 및 업무 교대차 방문한 미해군 합동군사업 무단(JUSMAG-K) 단장 일행에게 동일 건에 대해 진행사항 파악 및 조속 해결을 요청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추진사항을 확인 및 독촉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99년 4월 미 해군에서 2차 사업용 유도탄 수송용기를 미국에 송부하라는 정식 공문을 접수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제작한 고가의 튼튼한 용기를 재활용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한국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디어를 내어 우리측의 요구를 미국측에서 수용하겠다는 공식 회신을 접수 후 99년 6월 기 승인된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미국에 수송용기를 보내기까지 약 2년 동안 절차나 행정상의 어려움이 다소 있었지만, 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요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IMF 시대에 약 1억6천만원의 외화 낭비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



# 국제유가, 연말 고비로 한풀 꺾일 듯

서승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금년초 배럴당 11달러대에 머물던 서부텍사스 중질유(WTI油)는 지난 9월 23일 배럴당 25.35달러를 기록, 유가상승의 마지노선으로 불려지던 25달러벽을 급기야 넘어서고 말았다. WTI油가 배럴당 25달러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97년 1월 이후 무려 31개월만에 처음이다. 결국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시작된 금년 3월부터 불과 7개월이 지난 10월초 현재 2배 이상 오르는 급등세를 연출하였다.

## 주요 산유국의 추가감산 합의 등이 국제유가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

금년 3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의 기폭제가 된 것은 O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감산 합의였다. 지난 3월 11~12일 주요 산유국 대표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금년 4월 1일부터 210만4천b/d를 추가감산하는 내용의 '헤이그협정'에 합의하였고, OPEC 회원국들은 3월 23일 열린 제107차 OPEC 정기총회를 통해 헤이그협정을 추인한 바 있다. 추가감산 합의에 따라 산유국들이 감산해야 하는 규모는 기존의 295만b/d를 포함하여 505만4천b/d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감산량은 세계 원유생산량(7,600만b/d)의 6.6%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또한 OPEC의 추가감산 합의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된 국제유가를 더욱 끌어올린 것은 예상보다 양호한 OPEC의 감산이행실적이었다. 당시 많은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OPEC의 감산이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OPEC 회원국들의 감산실적은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 로이터는 OPEC의 감산실적이 4월 75%, 5월 85%, 6월 87%, 7월 86%, 9월 8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9월 하순 WTI油의 25달러벽 돌파는 OPEC이 9월 22일 열린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내년 3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현재의 감산정책을 계속 유지키로 합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 원유 수요측면에서도 동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경제회복, NATO의 유고공습에 따른 전쟁 관련 특수, 미국에서의 하기 휴가철 휘발유수요 증가 등도 유가상승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난해말 대부분의 석유시장 전문가들은 금년 국제유가가 전년에 비해 배럴당 1~2달러 가량 상승하는 정도에 그침으로써 低유가국면을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제유가가 25달러대를 돌파한 현시점에서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유가전망은 상당 폭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향후 유가상승을 가져올 주요인 요인을 보면 공급측면에서는 OPEC의 감산정책 고수, 수요측면에서는 아시아 및 유럽의 경제회복과 미국의 경제호황 지속을 꼽을 수 있다.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OPEC의 감산정책은, 지난 9월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현 감산정책의 유지방침이 재확인된데다 OPEC 회원국들의 공조체제에도 아직 균열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가급등세가 계속될 경우 OPEC 내에서 유가급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OPEC 회원국 및 非OPEC 산유국들이 증산으로 선회할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 감산정책이 예정시한인 내년 3월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다.

**배럴당 25~26달러대를 정점으로  
하향안정될 듯**

아시아 및 유럽의 경제회복과 미국의 경제호황

금년말까지 국제유가는 최근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나, 배럴당 25~26달러대(WTI油 기준)를 정점으로 한풀 꺾이며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유가는 금년 3/4분기 21~22달러대, 4/4분기에는 24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금년 평균유가는 배럴당 18~19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으로 인한 원유수요 증가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9월 중순 향후 세계 석유수요가 아시아의 수요 회복세와 미국의 경기호황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IEA는 금년 3/4분기 세계 석유수요는 전분기 대비 170만b/d 늘어난 7,480만b/d에 달하고, 본격적인 성수기인 4/4분기에 이르면 석유수요는 7,690만b/d로 전분기에 비해 210만b/d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향후 유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는 원유 공급측면에서 非OPEC 산유국들의 증산과 폐쇄유전의 재가동 그리고 미국·독일 등

〈표 1〉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 백만b/d)

		1999년					2000년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수요	OECD	48.8	45.6	47.3	49.2	47.7	49.6	46.6	48.2	50.3	48.7
	비OECD	27.5	27.5	27.5	27.7	27.5	28.4	28.5	28.3	28.3	28.4
	계	76.2	73.1	74.8	76.9	75.2	78.0	75.1	76.5	78.6	77.1
공급	非OPEC	44.6	44.0	44.3	45.1	44.5	45.4	45.0	45.0	45.5	45.2
	OPEC 원유	27.7	26.1								
	OPEC NGL	2.8	2.8	2.8	2.8	2.8	2.9	2.9	2.9	2.9	2.9
	계	75.1	72.9								
재고 증감		-1.1	-0.2								

자료 : IEA

선진국들의 유가상승 견제의지를 들 수 있으며, 원유수요 측면에서는 주요 석유소비국들의 에너지 절감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이자 주요 석유 소비국인 미국·독일 등은 유가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국의 비축유를 석유시장에 방출할 계획으로 있다. 이미 독일은 지난 8월 비축유의 방출을 이행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도 상원이 요청한 전략석유 비축분(SPR)의 매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유성수기인 동절기에 라니냐로 인한 흑한이 북반구에 도래할 것인지 여부도 유가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에 대해 선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향후 유가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고려할 경우 금년말까지 국제유가는 최근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나, 배럴당 25~26달러대(WTI油 기준)를 정점으로 한풀 꺾이며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평균유가는 금년 3/4분기 21~22달러대, 4/4분기 24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금년 평균유가는 배럴당 18~19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중순 세계에너지연구소(CGES)는

「월간석유시장 보고」를 통해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유가를 전망하였는데, 현재의 감산기조가 이어지고 동절기 흑한이 도래할 경우 금년 4/4분기 국제유가(브렌트油 기준)는 배럴당 25달러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였다(필자註: 통상 북해산 브렌트油는 WTI油에 비해 배럴당 1~1.5달러 정도 낮은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반면, 일부 OPEC 회원국들이 내년 3월 이전 감산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동절기 기온도 평년수준에 머물 경우 국제유가는 내년 1/4분기부터 하락세로 반전, 2/4분기에는 배럴당 19달러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CGES는 OPEC이 당초 합의대로 내년 3월까지 감산기조를 유지한 이후 4월부터 증산에 나서고 동절기 기온이 평년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제유가는 내년 1/4분기까지 강세기조를 유지하다가 2/4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 건설업·조선업에는 긍정적 영향 미칠 듯

원유수요의 100%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아직 외환위기를 완전히 벗어나

〈표 2〉 CGES의 향후 유가 전망

(단위: 배럴당 달러)

	1999년			2000년				
	3/4	4/4	평 균	1/4	2/4	3/4	4/4	평 균
고유가 · 현감산정책 고수 · 동절기 흑한	20.2	24.9	17.9	26.1	23.9	22.9	25.1	24.5
기준유가 · 현감산정책 고수 · 동절기 예년기온	20.2	23.6	17.6	23.3	21.7	21.9	22.0	22.2
저유가 · 현감산정책 붕괴 · 동절기 예년기온	20.2	23.3	17.5	22.0	19.3	18.5	17.6	19.4

註: 브렌트油 기준으로 전망시점은 99년 9월 18일임.

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최근의 유가급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석유전문가들이 예상하듯이 금년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25달러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경제는 성장·무역수지·소비자물가 등의 부문에서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년말 국제유가가 25달러선에 머물 경우 우리의 원유도입단가는 연초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배럴당 14달러)보다 3.3달러가 높은 17.3달러에 달할 것이다(필자註: 원유도입단가 상승폭(23.6%)은 과거 1, 2차 오일쇼크시 3~3.4배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임). 이 경우 금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0.25%p 하락할 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배럴당 1달러 상승시 0.11%p 상승효과가 있다(필자註: 한국은행 추계)고 가정할 경우 0.3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유도입단가가 17.3달러로 높아질 경우 우리의 금년 무역수지 흑자폭은 약 34억5천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필자註: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원유수입은 연간 8억7천만달러, 수출은 연간 1억4천만달러가 감소하여 10억1천만달러의 무역수지흑자 감소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함). 또한 CGES가 전망하듯이 2000년 평균유가가 배럴당 22달러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0.28%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5%p 상승하며, 무역수지흑자는 50억달러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제유가의 상승은 우리 기업에게 있어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직결됨으로써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며, 금융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여 금융불안 심리를 확산시키고 주가하락을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

금년말 국제유가가 25달러선에 머물 경우 금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0.25%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3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유도입단가가 17.3달러로 높아질 경우 우리의 금년 무역수지 흑자폭은 약 34억5천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은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중동특수가 예상되는 건설 및 조선업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생산비용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정유산업의 경우 원가 부담 및 수요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산업과 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산업도 생산비용 증가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그리고 생산원가 중 유류비중이 10%를 상회하는 전력·운수·음식업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자동차산업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감소로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중동경제의 활성화가 가시화될 경우 무엇보다도 건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중동지역이 우리 해외건설수주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의 해외건설시장이라는 점에 연유한다. 아울러 중동지역에서의 심해유전 개발에 따른 신규수주가 기대되는 조선업에도 국제유가 상승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의 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전기 전자제품, 섬유류 등의 수출확대도 기대된다. ■

# 단순한 관광과 여행의 차이

이현승

재정경제부 장관실 사무관

**미**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할 때 참으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학교 앞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여행중으로 보이는 미국인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고 조금 후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였고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일본에서 근무할 때 업무차 가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궁금하여서 그것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기대와는 달리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이 앞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감안할 때 나는 얼굴이 화끈하였고 당황스러웠다.

나는 무엇인가를 그 외국인이 오해하고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물었

다. 그 외국인은 자기가 세 차례나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부딪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부딪치고 나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였으며, 그것이 결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아마도 혼잡한 길이었거나 부딪친 한국 사람들이 바빠서 그랬을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상대방은 오해를 풀어주어서 고맙다고 하였지만, 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무언가 찝찝함이 계속 하여 남아 있었다.

미국에서 머무르는 중에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인들이 ‘미안하다’ (I’m sorry 또는 Excuse me)는 말과 ‘감사하다’ (Thank you)는 말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조금만 다른 사람과 부딪치거나 피해를 주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작은 일에도 항상 고마움을 표시한다.

한국에서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미안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외국에서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였던 한국 사람들도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교통 및 통신혁명으로 인하여 국경 없는 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각국의 이미지는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 똑같은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때,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제품 자체적인 요소 즉, 품질·가격·브랜드에 못지 않게 제품생산국가의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똑같은 가격이면, 개도국에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이미지는 해외에서 제품의 선호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21세기는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문화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끼는 동시에 외국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머무르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관광(sightseeing)과 여행(travel)을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관광이 단순히 명승지를 관람하는 것이라면, 여행은 그 나라의 삶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인을 유치하고 한국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관광차원의 접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에게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캐니언 같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요소가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반만년 역사와 삶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여행'을 중시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마디의 고운 말이 천냥 빛을 갠다"는 속담이 있다. 그 외국인과의 만남은 글로벌시대에 개인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한 나라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개인뿐만 아

니라 나라의 천냥 빛도 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며, 나에게 항상 좋은 자극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의 또 다른 경험은 우리의 국토와 삶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 조금만 아이디어를 발휘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인상 깊은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가면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익히 아는 IMF, IBRD 탄생을 결정하였던 회 의 (Bretton Woods System)가 개최되었던 워싱턴 호텔이 있고, 워싱턴호텔을 둘러싸고 있는 화이트산(White Mt.)이 있다. 봄·여름에는 신록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겨울에는 눈 덮인 산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산이다.

이 산에는 산중턱까지 드라이브할 수 있도록 도로가 놓여 있다. 그런데 여느 산을 드라이브하는 것과는 달리, 산의 입구에서 화이트산에 대한 설명을 담은 테이프를 나누어 주어 드라이브하는 동안에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테이프에는 산의 역사, 산의 생태계, 산세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산에 대한 이해는 온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맑은 공기, 보기만 하여도 여름의

무더위를 말끔히 씻어주는 산의 푸르름과 더불어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게다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더욱 더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프는 다음 사람을 위해 회수하지만, 산을 찾은 사람에게는 산 수료증 명서(Certificate of Master of Mountain)를, 자동차에는 'This car climbed White Mountain.'라고 적힌 스티커를 주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산에 못지 않은, 아니 훨씬 더 나은 산세와 경치·역사를 자랑하는 산들이 많이 있다. 산에 관한 이러한 예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과 문화를 보여줄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분 좋게 그리고 인상 깊게 말이다.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투자 및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제도 개선에 못지않게, 좋은 인상을 주는 고운 말 한마디, 아이디어 등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관광유적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느끼기 위하여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많았으면 한다. ■